

# 주간 통일정세

2015-19

## Contents

### I. 북한동향

1. 대남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3. 대내정치
4. 경제
5. 사회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납북자
6. 국군포로
7. 대북지원
8. 북한동향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동향

### 1. 대남

####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북한 “개성공단 임금인상 간섭 말라”...‘출근거부’도 시사(5/13, 연합뉴스)
  -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13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개성공업지구는 남측 기업가들과 하는 경제특구로서 당국이 간섭할 하등의 이유와 구실이 없다”며 “몇푼 안 되는 노임 인상까지 가로막아 나서는 것은 그릇된 처사”라고 비난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함.
  - 중국 대변인은 “개성공업지구의 연간 생산액이 날로 늘어나 오늘은 30여배 장성한 데 비해 우리 근로자들의 최저 노임은 1.5배밖에 늘어나지 못해 세상에 내놓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함.
  - 중국 대변인은 “남조선 당국은 우리의 합법적 법제권 행사를 놓고 3월분 노임을 지불하지 못하게 ‘조사’ 놀음까지 벌리며 위협공갈하고 있다”고 비난함.
  - 중국 대변인은 “국제적으로도 노임 체납은 형사 사건으로 취급되며 노임을 제때에 지불하지 않는 기업에 근로자들이 출근해 일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고 강조했다고 뉴스는 전함.
- 북한 “6·15와 8·15 공동행사 장소와 내용 바꿀 수 없다”(5/16, 조선중앙통신)
  - 6·15 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대변인은 16일 담화를 통해 “북과 남, 해외 민간단체들이 합의한 공동행사 장소와 내용을 남측 당국의 강요에 의해 바꾼다는 것은 그 누구도 납득할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대변인은 “6·15는 서울, 8·15는 평양으로 이미 행사 개최 장소를 합의했다”며 그러나 “남한 정부가 6·15 공동행사는 평양에서, 8·15 공동행사는 서울에서 하든가 아니면 두 행사 모두 서울에서 하자고 강요했다”고 주장함.
  - 그는 이어 “회의 마지막까지 그것을 강요해 행사 장소 문제는 물론 다른 문제들도 합의를 보지 못하게 했다”며 “공동선언 발표 15돌까지 불과 한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지금 전민족적 범위의 공동행사 준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밝힘.
  - 그는 “북과 남, 해외가 모여 진행하는 통일행사는 명실 공히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 밑에 북남 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추동하는 전민족적인 통일 회합,

민족단합의 대축전으로 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북한 “남한 ‘대화’ 타령 정치적 목적 위한 기만행위”(5/1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3일 “기만적인 ‘대화’ 타령, 감출 수 없는 속심”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괴뢰패당이 아무리 요술을 부려도 북남 대화를 저들의 더러운 정치적 목적 실현에 써먹으려는 불순한 흥심은 감출 수 없다”고 비난함.
  - 신문은 남한이 최근 들어 남북 대화와 관계개선 문제를 자주 언급하는 것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주변국의 반발과 세월호 참사, 성완중 사건으로 인한 민심 이반 등 정권 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괴뢰패당이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들고 나온 것이 바로 북남 대화 문제”라며 “북남관계를 저들의 더러운 정치적 목적 실현과 잔명 유지의 농락물로 삼는 것은 역대 괴뢰 집권자들이 늘 써온 비열한 수법”이라고 험담함.
  - 신문은 오는 8월 남한에서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이 열리면 대화는 또 중단될 것이라며 “남조선이 외세와 함께 벌리는 북침 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온갖 반공화국 대결책동을 걷어치우지 않는 한 북남대화는 결코 진행될 수 없다”고 강조함.

##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北김영남 “남북 진정성, 행동으로 나타나면 길 열려”(5/12,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북한의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남북관계 개선 방안과 관련해 “(남북 양측의) 진정성이 표현된다면 남북관계에 진전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고 보도함.
  - 김 상임위원장은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차대전 전승절 행사에 참석해 조우한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에게 남북관계에 대해 “분열을 제거하고 평화 통일의 길로 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윤 의원이 전함.
  - 김 상임위원장은 또 “정의롭고 정당하게 행동이 된다면 남북관계가 좋아지지

않겠느냐. (진정성이) 구체화한 행동으로 나타나면 길이 열리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고 윤 의원은 소개함.

## 라. 대남 군사 관계

- 북한, 연일 도발 위협…남북관계 개선 ‘삐걱’(5/14,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북한은 13일 오후 사전 예고에 이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 함포와 해안포 등을 동원한 야간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하며 무력시위에 나섰다고 보도함.
  - 이에 앞서 지난 9일에는 동해 원산 호도반도 부근 해상에서 북동쪽으로 KN-01 함대함 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고 전함.
  - 같은 날인 9일 북한 매체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수중 시험 발사를 단행했다고 전함.
  - 8일에는 서남전선군사령부 명의로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통지문을 보내 서해 북측 ‘해상분계선’을 침범하는 남측 함정에 대해 ‘예고 없는 직접 조준타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전함.
  - 뉴스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5월이지만 오히려 각종 악재가 이어지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라고 설명함.
- 北, 서해 연평도 인근 190여발 포사격…이틀째 무력시위(5/14,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북한이 전날 서해 백령도 인근 해역에 이어 14일에는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 북쪽 해역에서 포 사격 훈련을 하며 대남 무력시위를 이어갔다고 보도함.
  - 합참은 14일 “북한군은 오늘 오후 7시 10분께부터 9시 40분께까지 연평도 인근 NLL 북쪽 해상으로 함포와 해안포 등 190여발의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힘.
  - 북한군은 13일에도 오후 9시~10시 25분 백령도 동북방 NLL 북쪽 약 2km 부근 해상으로 함포와 해안포 등 130여발을 발사한 바 있다고 뉴스는 보도함.

## 마. 남북 경제 관계

- 개성공단 이사회, ‘임금 공탁’에 이견(5/12,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개성공단기업협회는 12일 이사회를 열어 북측 근로자의 4월분 임금을 정부에 공탁하는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업체 간 이견 속에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보도함.
  - 개성공단 입주업체 관계자는 “아직 북측 근로자의 태업이나 잔업 거부가 그리 심한 수준은 아니지만 공탁하는 순간부터는 심각해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고 전함.
  - 12일 이사회가 결론 없이 끝나면서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단은 조만간 개성공단을 방문해 북측 관계자와 면담을 할 계획이라고 뉴스는 덧붙였다.

## 바. 남북 사회 관계

- 광복 70돌 준비위 “19~20일 개성서 남북접촉 하자”(5/16, 연합뉴스)
  - 연합뉴스 16일자에 의하면, ‘광복 70돌, 6.15공동선언 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는 16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당면한 6·15 서울 대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지난 14일 북측 준비위에 19~20일 개성에서 접촉할 것을 제안”함.
  - 그러나 북한의 6·15 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대변인은 15일 6·15 공동선언 15주년 기념행사는 서울에서, 8·15 광복 70주년 기념 공동행사는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한 합의를 변경할 수 없다며 공동행사 무산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뉴스는 전함.

- 韓美합동군사연습들 및 통일부 장관의 '신뢰프로세스' 지지 발언 등을 거론 '반공화국 모략소동이 계속되는 한 남북 사이의 대화분위기가 마련될 수 없고 관계개선도 절대로 이룩될 수 없다'고 재차 주장하며 '대결정책을 계속 유지하며 외세공조로 압살책동의 도수를 높여겠다는 선언'이라고 왜곡 비난(5.11, 중앙방송)
- 우리 정부의 '남북대화·남북민간교류 추진' 발언은 '벼랑 끝에 몰린 저들의 통치위기를 수습해보려는 서퍽짜리 광대극에 불과하다'며 '괴뢰패당이 반공화국 대결책동과 북침전쟁 책동에 매달리는 한 그 어떤 대화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5.12, 중앙통신·민주조선)

- 대통령의 남미 순방(브라질 등 4개국) 中 “대북 압박공조 청탁”을 주장하며 “외세와의 반민족적 책동(‘북핵’ 등 韓美 공조)이 계속되는 한 북남사이의 대화와 관계개선이 이룰 수 없다”고 주장(5.13, 중앙통신·노동신문)
- 우리 軍 12사단의 대규모 야외기동훈련 실시(5.13-20) 예고 및 미국의 미군 3군단 1기갑사단 2기갑전투여단의 남한 순환배치 계획, KBS 방송·연합뉴스 인용 비난(5.13, 중앙통신)
- 최윤희 합참의장의 해군 2함대사령부 방문 발언(5.9, 적이 도발하면 철저히 응징·NLL 반드시 사수 등)에 대해 “미국 상전을 믿고 허세를 부린 것”이라며 ‘우리(北)의 상대도 되지 않는다’고 호언(5.16, 평양방송)
- 【전국연합근로단체 대변인 담화(5.17)】 대통령의 對北발언들(北인권문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체제불안정, 즉각적인 대응, 단호한 응징 등)과 전단지 및 성완중사건 등 시비하며 ‘민족의 재앙거리, 근로하는 우리 인민들과 조선여성들의 수치이고 비극’이라고 실명거론 맹비난(5.18, 중앙통신·중앙방송)
- 우리 국회의 ‘북한인권법’ 제정 움직임 관련 ‘민족의 화해와 단합, 자주통일을 악랄하게 반대하면서 체제통일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반민족적 범죄행위’라며 “악랄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5.17, 중앙통신·노동신문)

##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 가. 공식발언과 제안

- 북한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지원 반대한다”(5/1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6일 북한의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지원 방지를 위한 국가조정위원회’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북한 대표단이 지난 3~8일 호주 시드니에 있는 APG 사무국을 방문했다고 보도함.
  - 대표단은 사무국 방문에 이어 13~14일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APG의 검토킴과 협상을 진행했다. 대변인은 “양측이 협력 강화를 위한 실무적인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며 APG 측이 북한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힘.
  - 대변인은 “북한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지원을 반대하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에 맞게 국제금융감독기구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 나. 주요 매체 논평

- 북한 “핵전범국 미국이 핵위협과 군비경쟁 장본인”(5/1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1일 논평을 통해 “미국이 우리의 핵 위협설을 계속 여론화하고 있는 것은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 핵전과국인 미국이 저들에게 쏘리는 국제적 비난의 화살을 우리에게 돌려보려는 교활한 술책”이라고 주장함.
  - 통신은 “인류에게 처음으로 핵 재난을 들썩운 핵전범국이며 다른 나라들보다 더 큰 의무를 지니고 있는 미국이 핵정책 실현을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세계적인 핵위협과 군비 경쟁의 장본인”이라고 강조함.
  - 북한은 이어 미국이 핵무기 개발과 현대화를 부추기며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법적 의무를 무시하고 있으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국가들과 핵전쟁 연습을 공동으로 감행해왔다고 지적함.
  - 통신은 “미국이 저들의 강권적인 핵 압살 책동에 대처한 우리의 자위적 핵 억제력에 대해 ‘세계적인 핵위협’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세계 여론을 오도하려는 기만의 극치”라고 비난함.

##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 라. 대미국

- 북한 “북방한계선 미국이 설정한 것…묵과할 수 없다”(5/10,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10일 “북방한계선은 정전 직후 유엔군 사령관이 조선서해에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것”이라며 “미국 자신도 북방한계선의 비법성을 인정했다”고 주장함.
  - 이어 남한이 “정전 협정과 국제협약의 요구에도 어긋나며 더우기 북남 사이에 아무런 합의도 거치지 않은 이런 것을 북남 해상분계선인 듯이 강짜를 부린다”면서 “얼마나 파렴치하고 뻔뻔스러운가”라고 반문함.
  - 북한은 또한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유일한 해상경계선이라고 떠벌이면서



우리 측 영해에 침범하는 엄중한 군사적 도발 책동을 ‘정상적 작전활동’으로 강변하는 것이야말로 추호도 묵과할 수 없는 날강도적 궤변”이라고 비난함.

- 북한 제네바대사, 미국에 ‘북한인권법’ 폐지 요구(5/12, 미국의소리)
  - 서세평 북한 제네바대표부 대사가 미국 정부에 북한인권법 폐지를 요구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2일 전함.
  - 서 대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가 미국을 대상으로 개최한 정례인권검토(UPR) 회의에서 “미국 정부는 북한인권법 등 인권 문제와 관련한 역외적용 법률을 무조건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함.
  - 서 대사는 아울러 외국 영토에 미군 배치 중단, 중앙정보국(CIA)의 고문 문제 수사,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 중 미군의 민간인 살해에 대한 법률적·행정적 조치, 경찰력 남용 중단 조치 등을 촉구했다고 방송은 전함.

## 마. 대중국

- 북한, 중국 선양에 ‘장애자연맹’ 대표부 개설(5/13,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3일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지난 3월 조선 장애자보호연맹 대표부를 개설했으며, 주요 역할은 국제 교류 확대라고 보도함.
  - 방송은 조선장애자체육협회 서기장으로서 북한 장애인 체육분야에 전념해온 리분희 대표는 체육 외에도 국제 예술·문화 교류 확대사업을 총괄하게 될 예정이라고 전함.

## 바. 대일본

- 조선총련의장 아들 日경찰에 체포…“송이 불법수입”(5/12, NHK, 교도통신)
  - 허종만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의장 차남이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고 NHK가 12일 보도함.
  - 일본 경찰은 북한산 송이를 중국산으로 속여 수입함으로써 북한과의 수출입을 전면 금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조선총련 산하 식품도매회사인 ‘조선 특산물



판매'의 사장 김용작(70)씨와 사원인 허 의장 차남 허정도(50) 씨 등 3명을 체포했다고 전함.

- 교도통신에 따르면 조선 특산물 판매 회사는 허 의장의 '금고' 같은 존재로 알려져 있어 경찰은 북한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보도함.

■ 북한, 일본의 조선총련 의장 차남 체포 또 맹비난(5/1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조선인강제연행피해자·유가족협회는 15일 대변인 담화에서 “일본당국의 이 극악무도한 만행은 일제가 조선 인민 앞에 저지른 씻을 수 없는 만고죄악 위에 죄악을 덧쌓는 후안무치한 망동”이라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대변인은 조선총련은 북한의 보호를 받는 해외공민조직이며 일본 땅에서 북한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체포가 “우리 공화국에 대한 극도의 적대적 도발 행위”라고 강조함.
- 이어 대변인은 “지난날 국가적 강제연행 범죄를 한사코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고 참혹한 피해자인 조선 민족의 존엄을 지금도 백주에 무참히 난도질하는 야수적 본성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함.

## 사. 대러시아

■ “러시아, 北 김정은 초청하며 핵개발 중단 요구”(5/11, 지지통신)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9일 러시아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식에 불참한 배경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양측의 이견이 있었다고 일본 지지(時事)통신이 11일 보도함.
- 통신은 북·러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러시아가 김 제1위원장을 초청했을 때 러시아 방문의 전제 조건으로 핵개발 중단, 탄도 미사일 실험 및 수출 중지 등을 북한에 요구했다고 전함.
- 북한은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수용을 거부하며 김 제1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보류기로 결정으며, 또한 조율 과정에서 북측은 러시아에 무상 원조 제공을 요구했지만 러시아 측이 난색을 표명했다고 지지는 보도함.

## 아. 국제기구

- 특이사항 없음.

## 자. 기타 국가

- “북한, 우간다에 교관 파견…경찰 400명 훈련시켜”(5/13,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지난달 중순부터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400여 명의 현지 경찰을 훈련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 전함.
  - 이번 훈련은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지난해 10월 우간다를 방문했을 때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과 만나 양국 간 군사협력 강화를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방송은 설명함.
- “방글라데시 북한식당서 비아그라·술 불법 판매하다 적발”(5/15, 프로토타로)
  - 방글라데시 세관조사국과 경찰은 14일 오후(현지시간) 다카의 바나니 지역에 있는 ‘평양식당’에서 불법적인 술 판매가 이뤄지는 것을 확인하고 수색해 비아그라 210알을 비롯한 불법 의약품과 위스키, 캔맥주 등 주류를 압수했다고 현지 영자신문 프로토타로가 15일 보도함.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美 대통령의 ‘美日동맹’ 발언 관련 ‘미일동맹은 아태지역과 세계의 번영과 발전을 저해하고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암적 존재, 재앙만을 불러오는 침략동맹, 전쟁동맹’이라고 비난(5.11, 중앙통신)
-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은 ‘미일 상전들에 대한 괴뢰패당의 사대매국 정책과 친미친일 굴종행위의 필연적 결과’라며 ‘괴뢰패당이 아무리 목을 빼들어도 미국과 일본은 남조선 당국을 허수아비 정권, 주구로 밖에 여기지 않는다’고 비난(5.12, 중앙통신·노동신문)
- 美 볼티모어시 흑인폭동(흑인청년 경찰 구금 중 사망)을 거론하며 ‘미국이야말로 인권유린의 왕초, 인권불모지’라며 ‘인권유린의 왕초가 세계무대에서 인권재판관으로 자처하는 것은 위선의 극치’라고 비난(5.12, 중앙통신·노동신문)
- 日 아베 총리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인신매매 피해자’ 발언(4.27, 미국)은 ‘과거 역사를 부정하고 무마시켜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목적’으로 “과거범죄의 역사를 되풀이하지는 것”이라고 비난(5.13, 중앙통신·노동신문)

- 최근 美 해군의 무인기(X-47) 장거리급유실험 진행 및 수집 자료 활용 계획에 대해 “미국의 관심은 군사력에 의한 세계지배 야망 실현뿐”이라며 ‘미국의 첨단무기 개발 중단’ 주장(5.13,민주조선)
- 北 보건대표단(단장: 강하국 보건상), 5월 14일 ‘세계보건기구(WHO)총회’ 제68차 회의(스위스 제네바)를 참가하기 위해 평양 출발(5.14,중앙통신·중앙방송)
- 日 아베 총리가 패전 70주년에 발표할 담화에 ‘침략과 사죄’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과거사 반성을 어물쩍 넘기고 세계의 정의의 목소리에 대한 도전행위’라며 ‘일본은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죄 많은 과거를 반성하는 길로 나아가 한다’고 강조(5.15,중앙통신·노동신문)
- 미국의 ‘北의 인권침해’ 관련 독자적인 제재경도 착수에 대해 ‘미국의 인권소동은 우리(北)의 사상과 제도를 암살해보려는 목적’이라고 비난(5.16,평양방송)

### 3. 대내정치

#### 가. 김정은 동향

- ‘잠수함 미사일’ 참관 김정은, 군사 보급시설도 시찰(5/11, 조선중앙방송)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강원도 안변군 일대 군부대의 소 목장과 양어장 등 군사 보급시설을 시찰했다고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11일 보도함.
  - 방송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제580군부대 산하 ‘7월18일 소목장’과 ‘안변양어장’을 현지지도했다면서 모두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 건설됐다고 전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대규모 축산기지인 소 목장을 둘러보고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축산기지로 전변시키자”면서 대량 인공플란(초지) 조성과 사료공급 시설 보완, 수의 방역 강화 등을 주문했다고 방송은 보도함.

####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천안함 폭침 주역’ 김격식 북한 육군대장 사망(5/1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1일 김격식 육군 대장이 지난 10일 0시 30분 ‘암성중독에 의한 급성호흡 부전’으로 사망했다고 보도함.
  - 김격식은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사건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방을

담당하는 북한군 4군단장으로 활동하며 김영철 군 경찰총국장과 함께 이 사건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다고 설명함.

- 신문은 김격식에 대해 소작농의 가정에서 태어나 김일성 체제부터 현재까지 "혁명무력의 강화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했다"고 평가함.

■ 리수용 북한 외무상, 방북 태국 외무부 대표단 만나(5/12, 조선중앙통신)

-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12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돈 뿌라뭇위나이 태국 외무부 차관을 만나 담화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통신은 돈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태국 외무부 대표단은 전날 11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전함.

■ 국정원 “현영철 北인민무력부장, 반역죄로 공개처형”(5/13, 연합뉴스)

- 북한 내 군 서열 2위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우리의 국방부장관에 해당)이 지난달 30일에 반역죄로 처형됐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국가정보원이 13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현 무력부장은 지난달 24~25일 열린 군 일꾼대회에서 조는 모습이 적발되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시에 대꾸하고 불이행했으며, 김 위원장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부분 등이 ‘불경’, ‘불충’으로 지적돼 ‘반역죄’로 처형됐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고 전함.
- 현 무력부장은 이 같은 지적이 나오고서 2~3일 만에 평양 순안구역 소재 강건군관학교에서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고사포로 공개 처형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뉴스는 덧붙임.

■ 북한, 현영철 숙청 첫반응…확인도 부인도 안해(5/17,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17일 편집국 성명에서 "우리의 최고 존엄을 훼손하는 악담질을 계속한다면 멸적의 불소나기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함.
- 성명은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공포정치’니 뭐니 하고 우리를 악랄하게 헐뜯는가 하면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을 비롯한 여당 것들이 련일 ‘북체제 불안정’을 운운하고 있다”고 비난함.
- 북한은 이어 “최고 존엄과 체제에 감히 먹칠해보려는 괴뢰패당의 무분별한 망동을 극악무도한 특대형 도발이자 천추에 용납못할 대역죄로 낙인하고

준열히 단죄 규탄한다”고 비난함.

- 북한은 “우리의 최고 존엄을 훼손하려는 역적 무리들을 민족의 이름으로 무자비하게 징벌할 강철포신들이 격동상태에 있다”고 위협하며 “자멸을 재촉하는 어리석은 놀음을 당장 걷어치우고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함.

#### 다. 공식 행사

- 특이사항 없음.

####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특이사항 없음.

- 김정은 黨 제1비서, 5월 11일 故 김격식(육군대장) 영전에 화환 전달(5.11, 중앙통신·중앙방송)
- 제18차 평양 봄철 국제상품전람회 개막식(5.11~14),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5.11,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영남, 5월 8일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친서’ 전달(5.11, 중앙통신·중앙방송)
- 재일동포조국방문단(단장: 박영기 총련 상임위 부국장), 5월 11일 평양 도착 및 김일성父子 동상(만수대창작사) 참배(5.11, 중앙통신·중앙방송)
-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 예고 및 ‘대회 개최 계기와 의의·토의 주제’ 등 소개하며 모든 청년들의 ‘부르조아 사상문화·비사회주의적 요소 타파 및 김정은에 충성’ 강조(5.13, 중앙방송·노동신문)
- 박봉주(내각총리),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건설장과 삼지연학생소년궁전·삼지연군문화회관·베개봉국수집 등 삼지연읍지구 개건공사 정형 현지요해(5.15,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은 黨 제1비서,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촬영(5.17, 중앙방송·중앙통신)
-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은 ‘청년들에게 맡겨준 수령의 유훈관철전, 청년들의 성스러운 임무’라며 ‘당창건 70주년(10.10) 완공 위한 청년들의 총공격전’ 독려(5.16, 중앙방송·노동신문)

## 4. 경제

### 가. 정책 동향

- 북한, 극심한 가뭄에 ‘모내기 총력전’ 나서(5/1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2일 1면에 ‘은 나라가 총동원되어 모내기를 최적기에 질적으로 하자’라는 제목의 사설을 싣고 “밥을 먹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진심으로 모내기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촉구함.
  - 신문은 “계속되는 가뭄(가뭄)로 하여 나라의 물자원이 심히 줄어들어 모내기에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모내기 전투에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한다”고 주문함.
  - 나아가 농업부문에 종사하지 않는 주민들에게도 “농사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모내기전투에 필요한 노력과 설비, 물자들을 최우선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요구함.

### 나. 주요 조치

- 북한, 금강산국제관광지대 투자설명회 개최(5/12,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북한 조선금강산국제여행사는 12일 “올해 5월 말 금강산에서 세계 여러 나라 투자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개발을 위한 투자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함.
  - 뉴스는 설명회는 2박3일로 예정하고 있으며, 국제관광지대 개발에 관한 동영상 소개와 전망 계획 설명, 법률적 환경 설명, 개별 상담회, 토론회, 금강산 관광 등이 있을 예정이라고 전함.

### 다. 경제 상황

- “북한, 가뭄 전국확대…김정은 수상레저 호수도 말라”(5/12,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의 대표적 곡창지대인 황해도를 중심으로 가뭄이 북한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 전함.

- 방송은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한미연구소가 11일(현지시간) 구글어스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북한 전역에서 호수나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는 등 가뭄이 발생한 지역은 124곳으로 분석됐다고 전함.
- 북한, 자체 개발한 태블릿PC ‘묘향’ 공개(5/15,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최근 제18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 개막 소식을 전하며 전람회에 출품된 평제회사의 ‘묘향’ 사진과 사양 등을 방영함.
  - 평제회사 직원은 중앙TV에 출연해 “다양한 사무처리 기능과 화상처리 기능, 파일 압축 기능을 비롯한 각종 형태의 프로그램들을 적재한 새형의 판형컴퓨터(태블릿PC) 묘향을 내놓았다”고 소개함.
  - 또한 “첫 보기에도 간편하고 맵시 있을 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텔레비전도 시청할 수 있으며 축전지 용량도 크고 손 접촉도 아주 잘 된다”고 선전함.

## 라. 대외 경제 관계

- 북한-중국 교역 규모 13% 급감…“비료공급 차질 우려”(5/12,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2일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중국의 대북 교역액은 모두 11억88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2억7천228만 달러보다 12.9% 감소했다고 보도함.
  - 이 기간 중국의 대북 수출액은 5억6천325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5.6% 감소했고 대북 수입액은 5억4천555만 달러로 9.8% 줄었음.
  - 뉴스는 북중 교역 품목 중에서는 특히 중국산 비료 수출이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함.
- 북한, 국제상품전람회서 외국인 투자 유치에 총력(5/17,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대의 무역박람회로 매년 봄과 가을에 열리는 국제상품전람회는 지난 11~14일 러시아, 중국, 독일, 스위스, 프랑스 등 300여 개국 기업들이 참가한 가운데 평양 3대혁명전시관에서 열렸다고 연합뉴스가 17일 전함.
  - 특히 올해 전람회에서 북한은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를 포함해 각 도의 경제개발구에 대한 투자설명회를 개막 당일에 함께 진행했으며, 설명회에서는



경제개발구 안의 개발행위에 대한 법적 보장, 외국투자자의 기업 창설 및 경영규정, 현재 북한 내 경제개발구들의 실태와 전망 등에 대한 정보가 자세히 제공됐다고 뉴스는 전함.

- 조선중앙통신은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개발총계획과 개발과 관광을 동시에 밀고 나가는 것이 지대개발의 기본방향”이라며 설명회가 큰 관심을 끌었다고 소개함.

- 北, ‘올해 농사에 쓸 관개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계속 힘있게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5.15, 중앙통신)

## 5. 사회

###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특이사항 없음.

###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 마. 사회 동향

- 북한, 걸그룹 ‘모란봉악단’ 띄우기...“식량보다 중요” (5/1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4일 ‘모란봉악단의 진군 나팔소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모란봉악단의 음악에 바로 당의 목소리, 시대와 혁명의 요구가 담겨져 있다”고 강조함.
    - 이어 “오늘날 모란봉악단은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천만군민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항일유격대 나팔수”라며 “악단의 음악 포성의 메아리는 전체 군대와 인민을 무한히 흥분시키며 혁명열, 투쟁열을 북돋워 주고 있다”고 찬사를 보냄.
  
  - 북한, 대학체계 개편...종합대학·직업기술대학 신설(5/15, 조선신보)
    - 15일 조선신보는 “국내의 대학, 전문학교들이 부문별·지역별 종합대학, 직업기술대학, 일하면서 배우는 대학들로 개편됐다”고 전함.
    - 이번에 신설된 부문별 종합대학들은 학생 교육 사업과 함께 해당 부문의 학술자료·정보 관리와 원격교육 진행 등의 역할도 하게 된다고 설명함.
    - 북한은 또 전문학교들을 대학에 통합해 직업기술대학으로 바꾸거나 공장과 기업소, 협동농장 근로자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전환했다고 매체는 전함.
- 제15차 5·21건축축전 개막식, 5월 12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5.12,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텔레비전극창작사’에서 창작 형상한 TV연속극 ‘방탄벽’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소개(5.14,중앙통신)
  - 김선희 선수, 2015년 대만 육상대회(5.15~16, 15개국·지역의 남녀선수 170여명 참가) 여자 1,500m 경기 금메달 획득(5.16,중앙통신)
  - 산림과학원 과학자들의 “경제적 가치가 큰 둥근참나무(원산지: 북유럽)의 대량번식기술 확립” 선전(5.16,중앙통신)

© 북한연구실 제공

## II.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러시아, 北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초청하며 핵개발 중단 요구(5/11, 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9일 러시아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식에 불참한 배경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양측의 이견이 있었다고 일본 지지(時事)통신이 보도함.
  - 러시아가 김 제1위원장을 초청했을 때 러시아 방문의 전제 조건으로 핵개발 중단, 탄도 미사일 실험 및 수출 중지 등을 북한에 요구했고, 북한은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수용을 거부하며 김 제1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보류기로 결정함.
  - 또한, 조율 과정에서 북측은 러시아에 무상 원조 제공을 요구했지만 러시아 측이 난색을 표명했다고 지지는 보도함.
  
- 중국, “한반도 상황 복잡·민감…긴장 완화해야”(5/11, 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수중 발사 시험과 관련해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 “현재 조선반도(한반도)의 상황은 복잡하고 민감하다”고 평가하고, “중국은 관련 당사자들이 현재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행동을 해 조선반도의 평화·안정을 수호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관영 신화통신은 전날 서울발 기사에서 ‘SLBM 수중발사 시험 성공’ 주장은 북한이 자신들의 ‘영해’를 침범하는 남측 함정에 경고 없이 조준타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한 뒤 나온 것이라며 남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우려함.
  
- ‘北 SLBM’ 대응 한미일 3각 군사협력 가시화(5/12, 연합뉴스)
  -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 성공을 계기로 북한의 SLBM 위협에 대응한 한미일 3각 공조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특히 정부는 일본측의 공식 요청에 따라 이달 말 열리는 아시아안전보장회의(일명 상그릴라 대화)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지난달 10일 아시아안전보장회의에서

-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회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직후, 일본 방위성은 한국 국방부에 양국 국방장관 회담 개최 의사를 공식적으로 타진한 것으로 알려짐.
- 정부는 지난달만 해도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 대해 ‘논의도, 계획도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는데, 이 같은 분위기 전환에는 한일관계의 경색 국면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며 과거사와는 별개로 안보 분야의 협력은 증진해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이 작용함.
  - 또한, 북한이 최근 SLBM 사출 시험 성공으로 한일 양국의 안보 불안감을 자극한 것은 한일 국방장관 회담의 개최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으며,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열릴 경우 북한의 SLBM 위협도 의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한미일 3국이 북한의 SLBM을 공동의 위협으로 간주하고 정보 공유와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것임.
- **美관리들, “北 잠수함서 발사한 건 탄도미사일 아니다”(5/12,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9일(이하 현지시간) 잠수함에서 수중 발사했다고 주장한 탄도탄이 실제 탄도미사일이 아니었다는 미국 관리들의 주장이 나왔는데, 이는 북한의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 수준과 기술능력이 북한의 주장만큼 진전돼 있지 못하다는 정보 평가로 해석됨.
    - 미국 관리들의 이 같은 평가는 북한이 4~5년 내에 SLBM을 실전 운용할 가능성을 언급한 우리 군 당국의 평가와는 다소간의 온도 차가 느껴지는데, 우리 군은 북한이 “이르면 2~3년 내에 SLBM을 탑재한 신포급 잠수함을 전력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항공우주분야 연구기관 에어로스페이스 코퍼레이션의 존 실링 연구원은 AFP 통신에 “북한의 SLBM 개발에는 수년이 더 걸린다”고 밝힘.
  - **미 정부, “북한 잠수함 탄도탄 발사 안보리 결의 위반” 거듭 비판(5/12,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11일(현지시간) 북한이 잠수함 탑재 탄도미사일(SLBM) 발사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거듭 비판함.
    - 스티브 워런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런 형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최소한 4개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또한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북한이 ‘국제적 규칙을 지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표현한 것”이라고 지적함.

- 2006년에 채택된 안보리 결의 1695호와 2013년의 안보리 결의 2094호 등은 북한에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체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 정부당국자, “北 SLBM, 가장 효과적 외교대응 찾고 있다”(5/12, 연합뉴스)

- 정부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수중 시험발사 성공 발표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등을 통한 문제제기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등 우방과의 협의를 기초로 국제사회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으며,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외교안보 관계장관 회의에서 “국제사회와의 공조 노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라”라고 주문함.
- 우리 정부의 국제사회 대응 방안으로는 유엔 안보리에서의 논의를 요구하거나,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1718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 등이 가능성으로 거론됨.
- 노 대변인은 존 케리 장관이 18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라고 전하면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방한시 “북한의 SLBM 시험발사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함.

■ 일본, 북핵·탄도미사일 정보·감시·정찰 강화한다(5/12, 연합뉴스)

- 일본이 북한과 중국 등 주변국들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정보·감시·정찰(ISR) 역량 강화에 주력하기로 했는데, 특히 북한의 미사일 위협 증가와 중국과 영유권 분쟁 대상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등 난세이(南西)제도 방어를 위해 올해 방위예산의 최우선 과제로 ISR 역량 강화를 책정했다고 미국의 군사 전문지 디펜스뉴스가 11일 보도함.
- 일본이 곧 발표할 신(新)ISR 구상의 핵심은 공중과 우주 기반 토대 체계뿐 아니라 미국의 글로벌호크 무인기 도입과 선박 발진 무인기 개발, 최서단 요나구니(與那國)섬에 대한 연안 감시부대 배치 등 해양 정보 수집과 감시 역량 강화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임.
- 일본의 이런 움직임은 현재로서는 관련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자성에 따른 것이며, 특히 북한과 중국 등 일본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변국들의 활동과 관련해 미국의

ISR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자체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한몫을 함.

■ 申언론, 북한의 'SLBM 개발능력' 부정적 관측(5/12, 연합뉴스)

- 최근 다시 남북 간 긴장요소로 떠오른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기술에 대해 중국 관영언론이 다소 부정적인 관측을 내놨는데,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이날 북한 SLBM 시험발사에 대한 분석 기사에서 '전문가'를 인용, "SLBM을 개발하려면 많은 난관을 돌파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완벽한 SLBM 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정도"라고 보도함.
- 환구시보는 인도 역시 SLBM 기술을 보유하려고 장기간 공을 들였지만, 여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덧붙이고, SLBM 기술의 '난관'에 대해 2~4노트 속도로 이동하고 끊임없이 유동하는 잠수함 위의 미사일 발사자세 제어, 물 위에서의 재점화, 미사일 동체와 부품 소형화 등에 대한 기술확보의 어려움을 들었으며, 이어 "국제적으로 SLBM 탄체를 만들 수 있는 재료와 제조시스템 등은 봉쇄돼 있다"고 말함.
- 환구시보는 수중 발사단계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기포까지도 미사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SLBM 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대량의 실험 데이터와 연구자들의 경험 축적이 필요하다고 하며 북한의 SLBM 기술을 거듭 부정적으로 평가함.
- 이 신문은 또 다른 기사에서 "주목할 점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구실로 한국 배치가 추진되고 있는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가 새로운 '추진력'을 얻을 것인가 여부"라며 오히려 한국의 '대응'에 경계감을 드러냄.

■ 시진핑 주석-푸틴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 수호할 것"(5/12, 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최근 모스크바에서 발표한 양국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6자회담 재개'를 촉구한 사실이 확인됨.
- 중국 외교부가 홈페이지에 올린 중러 공동성명(전문)에 따르면,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이번 공동성명에 "양국은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수호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두 정상은 또 "양국은 6자회담이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고 각 국가가 미래를 함께 보여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건을 만들어내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함.
- '한반도 비핵화'와 '6자회담 재개'는 중국과 러시아가 줄곧 견지해온 입장이라는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갑자기 ‘불발’로 끝난 상황에서 이런 공동성명이 나왔다는 점이 주목됨.

-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이번 공동성명에서 양국이 최근 첫 ‘중러 동북아 안보대화’를 개최했다는 점도 확인하고 양국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새로운 틀을 함께 구축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중러 양국의 첫 ‘동북아 안보대화’는 최근 군사 안보협력 수준을 대폭 격상한 미국과 일본의 ‘협공’에 맞서기 위한 구체적인 ‘반격조치’ 중 하나로 풀이됨.

■ 케리 국무장관, 北 SLBM 발사에 “정세 불안행위…용납 못해”(5/16, 연합뉴스)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16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와 관련,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는데, 17일 방한을 앞두고 나온 케리 장관의 발언은 북한의 SLBM 위협에 대한 한미 양국의 공동 대응이 강화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됨.
- 왕이 부장도 이날 한반도 문제 등 국제이슈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힘.
- 케리 국무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지역 안정에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북한은 국제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미국과 중국은 평화적 방식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 필요성에 공감했다”면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고, 그는 “중국이 북한의 핵 야망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다짐함.

## 나. 미·북 관계

■ 미 국무부, “공개처형 사실이면 북 정권 잔인함 보여주는 것”(5/14,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13일(현지시간) 북한 내 군서열 2위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반역죄로 대공화기인 고사포로 공개 처형됐다는 첩보에 대해 “사실이라면 북한 정권의 극도의 잔인한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힘.
- 제프 래스키 국무부 부대변인 대행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북한 관리들이 처형됐다는 언론보도를 봤다. 그러나 나는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할 입장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으며, 또 “슬픈 일이지만 이런 종류의 보도는 처음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 미국 전문가, “현영철 숙청, 북한 체제불안 기증시킬 것”(5/16, 연합뉴스)
  -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숙청에 대해 ‘김정은 권력 기반의 취약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이런 행태가 앞으로 북한의 체제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내다봄.
  -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CS)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일본 석좌, 브루스 벡톨 텍사스 앤젤로 주립대학교수, 댄 스나이더 스탠퍼드대학 아태연구소 부소장,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부회장 등은 이번 숙청이 김정은 제1위원장이 그의 권력 기반을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의 정권은 더욱 불안해질 것으로 내다봄.
  - 한편, 현영철 부장 숙청 첩보에 대해 한국 국가정보원 발표 외에는 별다른 확인 수단이 없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반응’을 보인 전문가들도 있었음. 존 킬러리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입증되지 않은 보도에 대해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고 했으며,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도 국정원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여부를 잘못 예측했던 선례를 지적하며, 이번 숙청이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문제”라고 일축함.

#### 다. 중·북 관계

- 김정은 ‘방러 불발’ 두고 중국서도 관측 분분(5/11, 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불발된 원인을 두고 중국 외교가와 학계에서도 다양한 관측과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핵 문제와 방러 불발을 연관지어 분석하는 시각이 많음. 중국 전문가들은 “핵 문제에 대한 북러간 이견도 좁혀지지 않은데다 군사지원, 경제지원 측면에서도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란 분석도 내놓고 있음.

-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다른 여러 방러 불발 배경으로 국제무대에서 김 제1위원장에 대한 대우문제, 거리가 너무 멀어 비행기를 탈 경우 제기되는 안전문제, 김정은 시대의 북한이 과거만큼 안정적이지 않다는 ‘내부 문제’ 등이 있으며, 북한이 김 제1위원장의 공식 참가를 발표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계획하지 않았다는 설과 전통적 특수관계인 북중 관계를 고려해 러시아 방문을 접었다는 설 등도 제기됨.
  - 국제무대에서 김 제1위원장에 대한 대우문제와 관련, 러시아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부부의 자리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바로 옆에 배치하는 등 중국을 특별대우 했는데, 김정은 제1위원장이 모스크바를 찾았더라도 이 수준의 대우를 받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며, 그가 받아야 할 러시아로부터의 대우를 북한 내부에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고려 대상 중 하나였을 것으로 분석함.
- 시진핑 주석-김영남 상임위원장, 러시아서도 의미 있는 접촉 없어(5/11, 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사이에 인도네시아에 이어 러시아에서도 의미 있는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시진핑 주석 외에 중국의 다른 고위급 인사도 김영남 위원장과 회동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북중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은 전함.
  -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언론들이 김 위원장이 이번 행사기간 만난 각국 정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을 거론한 것으로 볼 때 두 지도자 사이에 간단한 만남이나 인사의 기회는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 중국 외교부도 이날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이 러시아에서 만났다는 북한의 보도 내용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에 “제공할 만한 소식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조 양국 지도자가 언제 정상회담을 할지는 쌍방의 ‘편리(한 시기)’를 봐야한다”고 답변함.
  - 이를 두고 여전히 냉각 상태의 북중 관계가 아직 복원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중국 접경도시 북한 활용 경제개발 잇단 추진(5/13, 연합뉴스)
- 지린(吉林)성에 허룽(和龍)시, 훈춘(琿春)시, 통화(通化)시 등 북한과 접경한 중국 도시들이 북한의 천연자원과 관광정책 등을 활용해 개발계획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음.

- 현지 매체인 길림신문(吉林新聞) 등에 따르면 지린(吉林)성 허룽(和龍)시는 인접한 북한 함경북도 무산으로 향하는 철도 건설을 서둘러 올 연말 완공할 목표이며, 이 철도를 통해 추정 매장량 45억에 달하는 아시아 최대 노천철광인 무산광산의 철광석을 활용, 철강기지를 조성하고 연간 240만t의 철강을 생산할 계획임. 허룽시는 또 지린성 난핑(南坪)을 거쳐 함경북도 동해안 항구도시 청진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해 수입자원가공기지, 녹색식약품 가공기지 사업의 통로로 활용할 예정임.
  - 중국 국가급 개발구인 변경경제합작구가 있는 훈춘시는 북한 항구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한·중·러 3국 간의 교통수송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가운데, 지린성 정부의 지원을 받아 ‘차항출해(借港出海·항구를 빌려 바다로 진출)’ 전략을 가동하고 이달 하순부터 러시아 자루비노항과 부산항을 잇는 육해 연계수송 항로를 개통할 계획임.
  - 지린성 통화(通化)시 산하 현급시인 지안(集安)시 역시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자강도 만포시와 마주한 이점을 살려 철도와 교량을 통해 북한과 경제합작 및 물류에 나설 방침임.
- 中,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기사 ‘보도통제’…북중관계 고려한 듯(5/14, 연합뉴스)
- 중국당국이 북한군 서열 2위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최근 숙청됐다는 소식을 다룬 관련 기사들에 대해 대대적인 ‘보도통제’에 나선 것으로 밝혀짐.
  - 중국에서 현영철 보도는 전날 오후 6시를 전후해 인터넷에서 삭제되거나 접속자체가 안되는 현상이 발생해 북중 관계에 대한 악영향을 우려한 중국당국이 ‘보도통제’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으며, 중국의 일부 언론과 전문가는 한국의 정보당국이 밝힌 ‘현영철 숙청’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기도 함.
  - 중국 국책연구기관인 랴오닝(遼寧)성 사회과학원 소속 튀차오 연구원은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나온 보도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 “이 보도는 북한을 헐뜯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환구시보는 “중국 누리꾼 6천 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한 결과, 50%는 한국에서 나온 보도내용을 믿지 않는다고 대답했다”고 전함.

## 라. 일·북 관계

- 日 집권당, 대북 신규 경제제재 검토(5/13, 연합뉴스)
  - 일본 집권 자민당은 일본인 납치 피해자 재조사가 지연되자 대응 차원에서 새로운 경제제재와 작년 해제한 인적 왕래 규제의 재발동 등 제재조치 강화 방안을 내달 중 정리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NHK가 보도함.
  - 회의에서 후루야 게이지(古屋圭司) 자민당 납치문제대책본부장은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를 포함한 일본인 실종자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시작된 지 7월로 1년이 되지만 구체적인 진전이 없다”며 “납치 피해자를 데려오기 위한 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압력이 필요하다”고 말함.

## 마. 러·북 관계

- 북한, 러시아 사하공화국에서 외화벌이 타진(5/16, 연합뉴스)
  - 림청일 나훗카 주재 북한 총영사가 이끄는 북한 경제사절단이 지난 3월28일부터 4월1일까지 사하공화국을 방문하여, 숙련 기술자와 건설 장비를 파견해 토목 공사를 벌이는 것을 제안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함.
  - 북한은 그동안 지리적으로 인접한 러시아 연해주와 하바롭스크 등에 노동자를 주로 파견해왔으나, 앞으로는 사하공화국까지 파견 지역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며, 또 지금껏 주로 벌목공이나 단순 건설 노무자를 해외에 파견했던 것과는 달리 숙련 노동자를 보내 대규모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외화벌이에 나서려는 것으로 보임.
- 러시아 전문가, “나진항 곧 수익 창출 가능”(5/16, 연합뉴스)
  - 알렉산드르 제닌 러시아 사회과학원 극동연구소 한국학센터 소장은 북한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나진항 물류사업이 조만간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함.
  - 제닌 소장에 따르면, 나진항 물류사업이 수익을 창출하려면 연간 물동량이 최소 400만~500만 정도여야 하며 올해 목표치는 150만 가량인데, “목표치를 이루는 데 특별한 정치적 장애물이 있지는 않을 것이며 다른 항구들과의 경쟁이

문제”라며 “나진항의 성공은 동북아시아에서 물류와 화물 수송 사업을 하는 국제 기업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관건”이라고 지적함.

-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2008년부터 러시아 극동의 하산과 나진항 간 철로 개보수와 나진항 현대화 사업, 복합 물류사업 등 ‘나진-하산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한국도 이 사업에 관심을 보이면서 지난해 말 시베리아산 석탄 4만5천t을 나진항을 거쳐 포항까지 시범 운송했고, 지난달과 이번 달에는 14만 분량의 2차 시범 사업도 시행함.

## 바. 기타

- 유엔 안보리, 올해에도 ‘북한 인권’ 다룬다(5/14, 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올해에도 북한의 인권 개선을 압박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준 주유엔 대사는 유엔대표부에서 뉴욕특파원 간담회에서 올해에도 북한의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밝힘.
  - 유엔은 작년에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부치는 내용의 결의안을 총회에서 채택했으며, 안보리에서도 정식 안건으로 올려 논의하였고, 오 대사는 “올해에도 총회가 3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전망했으나, 작년과 비교해 결의안의 강도가 강해질지 등은 아직 단정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임.
  - 안보리도 북한 인권을 논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식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오 대사는 “안보리에서 회의를 한 번 더 할지, 비공식 협의방식으로 할지 등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함.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북한 인권과 관련한 더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돼 북한에 큰 압박이 될 것으로 관측됨.
  - 북한은 지난달 30일 미국대표부와 한국대표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북한인권 행사에서 발언권도 없이 막무가내로 성명서를 읽고 퇴장하는 등 예민하게 반응함.

## 2. 주변국 관련

### 가. 한·미 관계

- 한미 의원외교 첫 협의회, “한미동맹은 독특…흔들 수 없는 유대”(5/15, 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 의회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사상 처음으로 공식 의원외교 협의회를 가졌는데, 회장인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국회 한미의원외교협의회 대표단은 이날 오전 미국 의회의 미한의원외교 협의회에 초대 공동회장인 피터 로스캠(공화·일리노이)·마이크 켈리(공화·펜실베이니아) 연방 의원과 회동함.
  - 지금까지 미국 의회에는 ‘코리아 코커스’라는 친한파 의원모임이 결성돼 있었으나 한국과의 의원외교를 전담하는 공식 채널은 없었는데, 한국 대표단의 올해 방미를 계기로 미국 의회는 로스캠·켈리 의원을 주축으로 미한의원외교 협의회를 발족시킴.
  - 양국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한국전쟁을 거치며 혈맹으로 맺어진 한미동맹이 세계 어느 동맹보다도 끈끈한 유대를 갖고 있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앞으로 동맹의 수준을 더욱 높여 아시아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양국 의회 차원에서 협력과 지원을 해나가기로 함.
  
- 미 하원 외교위원장, “독도는 한국 영토” 거듭 확인(5/15, 연합뉴스)
  -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14일(이하 현지시간)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볼 때 독도는 분명한 한국의 영토”라고 밝히고, “과거 미국 지명위원회(BGN)가 독도 대신 일제시대에 사용된 다른 이름을 사용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이후 독도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알게 됐다”고 강조함.
  - 앞서 로이스 위원장은 지난해 12월6일 연합뉴스·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를 통해 “독도 문제는 역사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면서 “올바른 명칭은 독도(The proper name is Dokdo island.)”라고 밝힘.
  
- 미 하원, 박대통령 방미 앞두고 ‘한미동맹 강화’ 천명(5/16, 연합뉴스)
  -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에 앞서, 미국 하원은 전체회의를



통과한 2016년 국방수권법안에 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을 계기로 박 대통령이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 제시한 한반도 통일정책을 지지하고 한미 동맹을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비전을 담은 ‘한미동맹 강화의 기회를 위한 의회의 인식’이라는 항목을 포함시킴.

- 국방수권법은 미 국방부의 권한과 책임, 업무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일종의 미 의회의 국방정책 운용지침서로서, 이 법안에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별도의 항목이 들어간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고 외교소식통들은 전함.
- 이 법안은 상·하 양원의 협의과정을 거쳐 올 8월 이후 최종 통과될 것으로 예상됨.

## 나. 한·중 관계

- 김장수 주중대사, “사드, 북한 외에는 영향 주지 않을 것”(5/12, 연합뉴스)
  - 김장수 중국 주재 한국대사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가 한반도에 배치되더라도 북한 외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친(親)중국 성향 홍콩 봉황(鳳凰)위성TV와의 인터뷰에서 “일각에서 꾸준하게 사드 배치를 거론하는 근본 원인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과 미사일 위협을 증대시키며 역내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며 “북한이 역내 불안정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 한국은 물론 중국에도 안보적 차원이나 전략적으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함.
  - 김 대사는 “사드는 미사일이 상승하는 단계가 아니라 떨어질 때 요격하는 무기체계”라며 “기본적으로 북한(미사일) 외에 우리나라를 지향하지 않는 미사일은 전혀 쓸모가 없다”고 강조하며,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MD)가 중국에 전혀 영향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문제는 거기에 같이 수반되는 X밴드 레이더가 중국 본토까지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으로 안다”며 “레이더도 사거리 제한이 있고 고도 제한이 있는데다 요격에 필요한 레이더 빔을 발사하게 돼 있어 중국이 우려할 바는 아닌 것 같은데 (중국 입장을) 모르겠다”고 말함.
- 중국, ‘아베 규탄’ 한국 국회 결의안에 지지(5/13, 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한국 국회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미국 의회 연설에서 침략과 식민지배를 언급하지 않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인신매매’로 표현



하며 본질을 흐린 사실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를 채택한 데 대해 일본의 역사 반성을 촉구하면서 간접적인 지지 의사를 밝힘.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 “중국은 일본 정부와 지도자가 역사에 대해 책임지는 태도로 무라야마(村山) 담화 등 역대 내각의 ‘역사를 직시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약속을 준수할 것을 촉구해 왔다”고 말하고, “일본이 실제 행동으로 역사 문제를 적절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때에만 국제사회의 진정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면서 일본이 아시아 국가와 미래로 향하는 우호관계도 맺을 수 있다고 강조함.
- 이런 반응은 한국 국회의 결의안에 대해 중국 측이 간접적인 지지 의사를 보낸 것으로 해석됨.

■ **중외교백서, “일대일로 시동, 국제사회 평화기여 성과”(5/13,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는 작년 한해 신경제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정책에 시동을 걸면서 국제사회 평화발전에 기여한 점을 외교상의 성과로 내세웠는데, 중국 정부의 이런 평가는 랴오닝(遼寧)성 성도인 선양(沈陽)에서 개최한 2015년판 ‘중국외교’ 백서 출간 설명회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남.
- 왕원빈(王文斌) 중국 외교부 정책기획국 부국장은 이날 설명회를 주관하면서 “중국은 작년 우크라이나 및 에볼라 위기, 중동지역 혼란 등 3대 중요 위기에 적극 대응해 국제사회의 호평을 받았다”며 “베이징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2개의 주요 국제회의를 개최해 아·태지역의 상호연결과 소통을 통한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말하고, 올해 “하나의 중점, ‘일대일로’ 건설을 전면 추진해 관련국들 간 상호교류와 무역거래 강화에 힘쓰며, 2개 주요 노선, ‘평화’와 ‘발전’ 실현을 위해 국제회의 및 국제이슈에 적극 참여·협조하겠다”고 강조함.
- 한국과 관련해 백서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등 한반도 평화안정과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고 설명함.
- 설명회에 참석한 유복근 주선양 한국부총영사는 “중국 외교백서는 중국 외교 현황과 정책을 설명하는 포괄적이며 권위있는 문서”라며 “이번 백서가 2014년 한·중 양국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및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양자회담 등을 다루었다”고 말함.

- 베이징서 3년만에 ‘한중일 대테러 협의회’ 열려(5/15, 연합뉴스)
  - 2012년 이후 중단됐던 한중일 대(對) 테러 협의회(제3차 회의)가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되었고, 중국 외교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협의회에서 3국은 국제지역의 반테러 상황, 각국의 반테러 상황 및 관련 정책, 인터넷 테러리즘 대처, 극단주의 세력 척결 등을 의제로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함.
  - 또 “이번 협의회는 지난 3월 중일한 제7차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합의한 중요한 결과를 실행에 옮긴 것”이라며 “3국의 반테러 영역에 대한 정책대화와 실속 있는 협력을 더욱 늘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임.

#### 다. 한·일 관계

- 日여당중진, “한국, 유네스코 유산등재 정치문제화 말아달라”(5/11, 연합뉴스)
  - 일본 집권 자민당의 중진인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전 관방장관(현직 중의원 의원·9선)은 한국 국회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 산업시설의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재 추진에 대해 한국 측이 정치문제화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힘.
  -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는 최근 일본 규슈(九州) 지역을 중심으로 8개 현에 걸친 총 23개 산업시설의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유네스코에 권고했는데, 일본 정부가 추천한 이 23개 시설에는 나가사키(長崎) 조선소, 하시마(端島, 일명 ‘군함도’) 탄광 등 조선인 수만 명이 강제노동한 현장 7곳이 포함됨.
  - 조선인 강제노동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채 일본 산업시설들을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은 인권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7월 초 세계유산 등록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앞두고 양국 외교 당국은 오는 22일 도쿄에서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 국회, ‘반성없는 아베 총리 규탄 결의안’ 채택(5/12 연합뉴스)
  - 국회는 본회의에서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역사 왜곡과 반인권적

행태를 비판하는 ‘침략역사 및 위안부에 대한 반성 없는 일본 아베 총리 규탄 결의안’을 채택함.

- 결의안은 아베 총리가 지난달 미국 하버드 대학 강연과 미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침략과 식민지배를 언급하지 않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인신매매’로 표현하며 본질을 흐리는 등 반인권적 행태를 보이는 데 대해 규탄하고, 또 야스쿠니 신사참배, 집단적 자위권 행사, 독도 영유권 침해, 교과서 왜곡·날조로 이어지는 아베 정부의 비상식적 행동이 한·일 관계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엄중히 경고함.
  - 이에 따라 일본 정부에 진정한 사과와 국가적 책임을 요구하고, 위안부 피해를 당한 아시아 국가, 네덜란드, 유엔 등과 연대를 통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을 촉구함.
  - 국회는 또 ‘일본 정부의 조선인 강제 징용 시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규탄 결의안’도 통과시켰는데, 이 결의안은 일본이 침략 역사를 산업혁명으로 미화해 고통 속에 희생된 우리 국민을 우롱했다며 진정한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함.
- 일본, 자살특공기지 있던 곳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5/13, 연합뉴스)
- 일본이 태평양 전쟁 때 자살특공대 기지와 조선인을 강제징용한 부대가 있던 곳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인을 강제징용했던 ‘군함도’ 하시마(端島) 탄광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유력하고, 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잠정 목록에 또다른 강제징용지 사도(佐渡) 광산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어서 관련된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임.
  - 앞서 일본 환경성은 2013년 1월 31일 “외무성, 문화청 등 여러 기관과 협의한 결과 아마미·유쿠 지역을 2016년까지 세계유산 잠정 목록(자연유산)에 올리기 위해 관련 문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들 지역은 일본군 자살특공대 기지가 있었거나 조선인들을 대거 강제징용한 군사시설이 있었지만 이런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잠정 목록에 곧 올라갈 개연성이 크다고 위원회는 말함.
  - 아마미 군사시설에 동원된 조선인은 정부에 정식으로 피해 신고가 접수돼 확인된 것은 23명이지만 실제로는 수천 명에 달할 것으로 위원회는 보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전라도 지역에서 끌려갔으며, 일본군 제228설영대에 소속돼 맨손으로 바위나 돌산을 깨 자살특공대 출격 기지를 닦는 등 가혹한

노동에 시달림.

- 위원회 관계자는 “일본 정부는 자살 특공기지와 수많은 조선인이 강제동원으로 희생당한 군사시설이 있던 곳을 문화유산으로 포장해 세계유산에 등재하려 하고 있다”며 “단순히 노동력을 착취당한 곳이 아니어서 하시마 탄광이나 사도 광산보다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말함.

■ 日집단지위권법안 각의결정…‘전쟁할 수 있는 나라’ 문턱(5/14,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개최,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1개 안보 법률 제·개정안을 의결하면서, 2차대전 패전 이후 평화헌법 체제 하에서 교전권을 스스로 포기한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의 문턱에 올라섬.
- 각의는 자위대법 등 10개 법률 개정안을 ‘평화안전법제정비법안’으로 일원화해 신법인 국제평화지원법안과 함께 2개 법안을 의결하는 형식을 취했는데, 11개 법안 중 무력공격사태법 개정안은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일지라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본으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존립위기사태’로 규정해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아베 내각이 작년 7월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용인키로 한 집단 자위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가능해지는데, 집단 자위권 행사는 우방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것이 가능해지면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전쟁 포기’, ‘교전권 부정’ 등을 담은 헌법 9조 하의 ‘전수(專守) 방위(상대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 원칙은 존립의 기로에 섬.
- 또 한반도 유사시의 미군 후방지원을 상정한 현행 주변사태법을 대체할 중요영향사태법안은 ‘방치할 경우 일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태’ 발생시 전세계 어디서나 자위대가 미군 등 외국 군대를 후방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담았으며, 법안이 통과되면 자위대의 후방지원 대상도 미군에서, 미군을 포함한 외국군으로 확대되고, 후방지원 활동지역도 ‘일본 주변’에서 전세계로 넓어짐.
- 평시와 무력충돌 상황의 중간 단계인 ‘회색지대 사태’시 일본 방어를 위해 활동하는 미군 등 외국 군대를 자위대가 무기를 써가며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 법안에 포함됨.

-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가 한국 영역에 진입할 경우 반드시 한국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근거가 될 ‘영역국가 동의’ 규정은 타국군 후방지원 활동을 다루는 중요영향사태법안과 국제평화지원법안에 들어간 반면 집단 자위권 관련법인 무력공격사태법 개정안에는 들어가지 않음.
  - 아베 내각은 15일 11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야당들은 신중한 법안 심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중·참 양원 과반수 의석을 보유한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6월 하순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올해 여름 안에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 일본 외무성, ‘독도 방어훈련’ 한국 정부에 항의(5/15, 연합뉴스)
    - 일본 외무성은 한국 해군과 해경의 독도 방어 훈련에 대해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고 밝혔는데, 주한 일본대사관은 이날 오후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펴면서 한국 외교부에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함.
    - 앞서 한국 해군과 해경은 지난 14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독도 방어 훈련을 비공개리에 실시함.

##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마. 미·중 관계

- 미국 워싱턴포스트, “중국이 북한 핵무장 중단시킬 유일한 나라”(5/11, 연합뉴스)
  -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0일(현지시간) ‘이웃의 위협’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핵무기 보유국이 되려는 북한의 끊임없는 시도를 중단시킬 수단을 가진 것은 오직 중국뿐”이라고 지적함.
  - 이 신문은 지난 2월 중국과 미국의 핵 전문가들의 비공개 회동에서 나온 ‘북한이 20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중국 측 주장과 ‘북한이 5년 내로

50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이라는 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보고서를 언급하며 중국의 역할을 촉구함.

- WP는 “미국은 최근 수년 동안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기를 희망했지만, 중국은 그것이 북한 정권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망설여왔다”면서도 “중국이 재검토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중국은 수수께끼의 북한 리더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해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라고 전함.

■ 미 의회, 핵기술 이전시 중국 잠수함 전력강화 우려(5/11, 연합뉴스)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지난달 21일 합의된 원자력협정 개정안은 중국이 미국산 원자료를 추가로 구매하고 미국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과 시설을 도입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는데, 의회 일각에서 미 핵기술이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함.
- 이에 따라 미 상원외교위원회는 이날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등 정부관리 5명이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 심사에 착수하는데, 1998년 3월에 발효된 이 협정은 기한이 연말까지로 만약 의회가 문제 삼지 않으면 그대로 발효됨.
- 미 행정부는 이 협정의 개정을 통해 미 기업이 핵원자료를 중국시장에 팔 수 있을 뿐 아니라, 중국이 더욱 강화된 핵 기술과 물질에 대한 통제를 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반면, 미 의회는 대형펌프가 중국 해군 잠수함에 장착될 가능성에 크게 우려하는데, 이는 이 펌프가 소음을 줄여 잠수함에 대한 적 레이더망의 탐지와 추적을 매우 힘들게 할 수 있어 해군력 증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임.
- 특히 중국이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南沙群島)의 전초기지 부지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영유권 주장을 대폭 강화하는 과정에서 해군력을 크게 키우고 있다는 미 행정부의 판단도 중국으로의 핵기술 이전을 불안케 하는 요인이며,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제3국에 넘길 가능성과 사용후 핵연료로부터의 플루토늄 추출 및 재가공 등도 미 의회가 우려하는 대목임.

■ 남중국해에 발 담그는 미국·일본…영유권 분쟁 격화(5/14, 연합뉴스)

-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둘러싸고 중국과 주변국의 대립 구조가 미국과 일본의



직·간접적인 개입으로 확대 양상을 띠고 있는데,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정면으로 맞선 필리핀과 베트남은 미국, 일본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으로서는 군사·경제 패권을 다투는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를 노리는 셈임.

- 일본 해상보안청과 베트남 해안경비대는 베트남 중부 다낭지역 인근 해상에서 합동 훈련을 했는데, 훈련 내용은 주로 해상 수색·구조 활동이지만 베트남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는 파라셀 군도(베트남명 황사, 중국명 시사<西沙>군도)를 멀리 마주한 곳에서 실시하며 공조 체제를 다짐.
- 4월 말에는 미국과 필리핀의 연례 합동 군사훈련이 필리핀 육해공 군사기지를 중심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만2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됐으며, 지난 2월 미국과 일본이 베트남의 해양전력 증강을 도우려고 고속 초계함 5척과 중고 초계함 1척을 각각 지원했고, 필리핀 또한 미국에 최신 군사장비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음.

■ 미 해병대, 하와이서 아태 23개국 콘퍼런스…중국 제외(5/14, 연합뉴스)

- 최근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갈등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다음 주 하와이에서 열리는 미 해병대 초청 아태지역 상륙부대 콘퍼런스에 중국만 참가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함.
- 18일부터 하와이에서 열리는 이번 콘퍼런스에는 일본, 필리핀, 베트남 등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는 국가를 포함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23개국의 해병대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이번 행사에서 미 해병대는 선박과 육지를 연결하는 해병대 상륙 돌격 전술, 해안 상륙 전술 등을 설명하고 각국 관계자들은 헬리콥터 항모, 상륙함 등이 동원된 미 해병의 훈련을 참관하고, 이를 통해 실제 전투나 재난 구호 등의 활동에서 미군과 각국 해병대 간 다각적인 공조 토대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됨.
- 미 해병대와 아태 23개국의 콘퍼런스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중국이 참가 대상에서 빠졌는데, 행사 내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과 다른 참가국의 ‘경쟁자’이기 때문에 초청해선 안된다고 언급돼 있고, 이와 관련해 하와이 주둔 미 해병대 대변인도 이런 종류의 행사에서 중국과의 군사 교류는 미국법이 금지하는 사안이라고 밝혔으며, 미 국방부 관리들도 미군이 주도하는 각종 훈련 행사에 중국 측 인사를 배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고 설명함.
-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는데,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레브리핑에서 “어느 국가든 다른 국가를 초청해 회의나 공동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이 활동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미국 측을 겨냥함.

- 러셀 차관보, “남중국해 분쟁, 국제사법재판소 중재도 가능”(5/14, 연합뉴스)
  -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ICJ)를 통한 중재 가능성을 언급하며 평화적인 해결을 강조하고, 중립적인 제삼자에 각자 주장의 타당성 평가를 맡기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면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중국을 제소한 필리핀의 사례를 들음.
  - 러셀 차관보는 남중국해를 둘러싼 모든 분쟁은 평화적으로 논의되고 해결돼야 하며, 위협이나 무력 또는 다른 형태의 강압을 통해 주장을 관철하려는 것은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함.
  - 그는 중국이 남중국해에 건설중인 인공섬은 갈수록 군사적 목적을 위한 것임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그 어떤 국가라도 크기와 힘을 키워 다른 나라들을 종속시키려 시도한다면 미국이 이를 무시할 순 없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는데, 러셀 차관보의 이런 발언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갈등 수위가 고조되는 가운데 나옴.
- ‘남중국해 갈등’ 미중, 베이징서 ‘불꽃공방’ 예고(5/15, 연합뉴스)
  -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놓고 서로 간에 대응 수위를 끌어올린 미국과 중국이 베이징에서 다시 한번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됨.
  - 16~17일로 예정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이번 방중은 미중 전략경제대화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가을 방미 문제를 협의하려는 것이지만, 미국은 케리 장관의 방중에 앞서 중국이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南沙>군도)에서 건설 중인 인공섬의 12해리 이내에 군용기와 군함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대중 공세 수위를 높임.
  -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지난 13일(현지시간) 미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의 동아시아 해양 문제 관련 청문회에 참석, 케리 장관이 이번 방중에서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중국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는 또 케리 장관이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과 관련, 중국에 경고를 보낼

것이라고 덧붙임.

- 중국은 이같은 미국의 대중 강경기조에 대해 ‘맞불전략’으로 대응할 기세이며, 중국 외교부는 이미 미군의 ‘스프레틀리 군도 12해리 진입 검토’를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중국은 스스로 영토 주권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면서 영유권 강화조치를 시사함.

■ 케리 국무장관, 중국에 남중국해 긴장완화 조치 촉구(5/16, 연합뉴스)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에 남중국해에서의 긴장완화 조치를 촉구하고 중국의 인공섬 건설에 우려를 표명함.
- 미국은 최근 중국이 스프레틀리 군도(중국명 난사<南沙>군도)에서 건설 중인 인공섬의 12해리 이내에 군용기와 군함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중국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여왔으며, 이에 대해 중국 측은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앞으로도 영토주권을 수호하겠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짐. 중국은 미국의 계획을 도발적 조치로 규정하고 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면서 ‘엄중한 우려’를 표명함.
- 중국은 남중국해에 현재 7개의 인공섬을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 한 곳에 군용기가 드나들 수 있는 규모의 활주로를 만들고 있으며, 현재 스프레틀리 군도 일대의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중국을 포함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베트남 등 6개국이 맞선 상태임.
- 왕 부장은 회담 후 개최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미국이 양자 투자협정 협상의 가속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면서 미국 측에 대(對)중 첨단기술 수출 관리·통제를 완화해 줄 것도 촉구하고, 회담 모두발언에서 “양국이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고 갈등을 적절하게 처리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함.

■ 케리 국무장관, “미국은 AIIB 환영”(5/17, 연합뉴스)

- 중국을 방문 중인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을 환영한다고 밝혔는데,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케리 국무장관은 전날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AIIB를 존중한다”면서 “많은 오해가 있어 이를

해명하려한다”며 이같이 말함.

- 그는 “아시아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프라투자에 대한 절실한 수요가 있다”면서 “미국은 AIIB를 포함한 새로운 다자 기구를 환영한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그 전제조건으로 새로운 기구가 국제사회에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그 기준이란 실질적인 다자 의사결정 구조와 환경, 사회적 안전장치 확보 등이며 이는 “글로벌 금융기구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함.
- 케리 국무장관은 AIIB가 이런 특정 기준을 채택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를 위해 중국 및 다른 관련국과 지속적으로 직접 협의를 하겠다고 말하고, 또 AIIB가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현존 기구와의 프로젝트에서 공동 파이낸싱이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임.
- 왕 부장은 이번 회담에서 중요한 점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9월 방미를 위해 준비라고 말하고, 그는 케리 국무장관과 시 주석 방미를 위한 의제선택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함.

■ 중국 미사일 전력강화···다탄두 ICBM 개발 확대(5/17, 연합뉴스)

- 중국이 장거리 탄도 미사일에 다탄두를 장착하며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는데, 지난 8일 공개된 미국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동풍(東風·DF)-5’에 여러 개의 탄두가 서로 다른 목표를 공격하는 ‘다탄두 각개 유도 미사일(MIRV)’을 새로 장착함.
- DF-5는 사거리가 1만 2천~1만 5천km에 달해 태평양을 건너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로, 1971년 처음 시험 발사되었으며, 미 국방부는 중국이 DF-5 20기를 지하격납고에 보유 중이라고 밝혔고 민간 전문가들은 이 20기 가운데 10기가 개량돼 미사일 1기당 3개씩의 탄두가 장착됐을 것이라고 추정함.
- 중국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탄두를 소형화해 1개의 미사일에 여러 개의 탄두를 장착하는 기술을 보유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냉전시대 미국과 옛 소련이 주도한 핵무기 개발 경쟁에 동참하지 않았는데,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취임 이후 항공모함과 잠수함을 개발하고 군을 현대화하는 등 향후 동북아 지역에서 있을 수 있는 위기에 대비해 미국에 맞설 군사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NYT는 분석함.

- 애슐리 텔리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미사일 업그레이드는 장기적 관점에서 미국과의 경쟁에 준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이 분명하다”고 말하는 한편,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 개발 행보에 대한 대응이라는 분석도 나옴.

■ 미·중, 베이징서 재차 충돌…‘남중국해 갈등’ 임운(5/17, 연합뉴스)

-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문제로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을 찾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에 대한 중국 고위당국자들의 태도를 미국 AP통신은, “중국 당국자들은 공손했다. 그러나 ‘긴장완화’를 촉구하는 미국의 요구를 날카롭게 물리쳤다”며 이같이 압축하였는데,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 이슈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충돌함으로써 남중국해 긴장도는 당분간 높아질 가능성이 커 보임.
- 양국은 이번 접촉에서 “미중 신형대국관계 구축”, “남중국해 긴장 해소” 등으로 상반된 목소리를 냈는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케리 장관과 만나 “중미 관계는 여전히 안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가 계속 발전하고, 중미관계가 중미 신형대국관계 구축을 향해 나가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함.
- 중국이 제창한 ‘미중 신형대국관계’는 미국이 중국의 ‘아시아 주도권’을 인정해야 한다는데 중점을 둔 개념으로, ‘남중국해 갈등 해소’에 초점을 두고 중국을 찾은 케리 장관에게 시 주석이 이 개념을 들이민 것은 결국 남중국해 등에 존재하는 중국의 ‘핵심이익’을 건들지 말라는 완곡한 경고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됨.
- 케리 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이뤄지는 중국의 인공섬 건설에 우려를 표시했다”면서 “중국 측에 긴장 완화와 외교적 신뢰를 증진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한데 대해 왕 부장은 “‘난사군도’와 주변 도서에서 이뤄지는 인공섬 건설은 완전히 중국 주권 범위 내의 일”이라면서 “인민들의 요구이자 합법적인 권리”라고 맞서고, “중국의 국가 주권과 영토 안정을 수호하려는 의지는 확고하며 절대로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못 박음.

## 바. 미·일 관계

- 일본 배치 오스프리 수년내 배증 전망…미군 자위대 동시 운용(5/12, 연합뉴스)
  - 일본에 배치된 수직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가 수년 내에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국 국방부는 자국 공군의 CV22 오스프리 10대를 2021년까지 일본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11일(현지시간) 발표함.
  - 국방부는 도쿄도(東京都) 요코타(横田)기지에 2017년 하반기에 오스프리 3대를 배치하고 나머지 7대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보낼 예정이라고 설명하였고, 일본 정부는 이와 별도로 자위대 장비로서 오스프리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2018년도까지의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오스프리 17기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반영했으며 최근 미국 정부는 오스프리 17기를 일본에 매각한다는 방침을 의회에 통보하였고, 일본 정부는 이 오스프리 17대를 사가(佐賀)공항에 배치해 육상자위대 장비로 활용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음.
  - 미국 정부는 일본에 V22 오스프리를 매각할 예정이며 이는 미국 정부가 외국에 오스프리를 넘기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큰데, 미국 국방부는 미군 특수부대가 일본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걸쳐 자연재해를 비롯한 위기 또는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호운용성 제고 등을 통한 일본 자위대와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함.
  - 일본은 중국이 해양 진출을 확대하면서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釣魚島>) 열도를 둘러싸고 충돌할 가능성이 큰 만큼 기동성을 강화하는 것이 역지 능력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음.
- 美교과서출판사, “군위안부 기술 수정하지 않을 것”(5/16, 연합뉴스)
  - 미국 출판사 맥그로힐은 일본 정부가 수정을 요구한 고등학교용 교과서의 군위안부 관련 기술을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맥그로힐은 “일본 정부 대표 등이 ‘전통과 교류(맥그로힐의 세계사 교과서용 도서)’의 군위안부 부분에 대해 기술 변경을 요구해왔다”고 소개한 뒤 “위안부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학자들의 입장이 흔들리지 않으며, 우리도 집필자의 저술과 연구, 발표를 명확하게 지지하는 쪽에 서 있다”고 말함.
  - 맥그로힐이 펴낸 로스앤젤레스 등의 공립 고교에서 교과서로 사용되는 ‘전통과 교류’는 “일본군이 14~20세의 여성 약 20만 명을 위안소에서 일 시키기 위해

강제로 모집·징용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일본 정부 당국자와 우익 성향 학자들은 책에 기술된 군위안부 피해자 숫자와 “군위안부를 일왕의 선물로 군대에 바쳤다”는 표현 등에 이의를 제기하며 맥그로힐에 수정을 요구한 바 있음.

## 사. 미·러 관계

- 케리 국무장관, 소치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5/12, 연합뉴스)
  - 지난해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후 처음으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등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미국 국무부가 11일(현지시간) 밝혔는데, 케리 장관은 러시아 지도부와 이란, 시리아,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논의할 계획임.
  - 국무부는 “케리 장관의 이번 방문은 러시아 고위인사들과 직접적 연락 채널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하였고, 러시아 외무부도 소치에서 케리 장관과 라브로프 장관 간 회담이 열린다고 확인함.
  - 크렘린궁은 그러나 푸틴 대통령과 케리 장관의 회동에 대해 확인하지 않음.
- 러시아, “미국이 전략적 안정성 훼손 땀 핵전력 증강”(5/17, 연합뉴스)
  - 러시아가 미국이 전략적 안정성을 해치는 행보를 계속할 경우 핵전력 증강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타스 통신에 따르면 유엔에서 열린 핵확산 금지조약(NPT)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한 러시아 외무부 비확산 및 통제국 국장 미하일 울리야노프는 현재 핵 군축 전망을 훼손하는 부정적 경향들이 힘을 얻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 요소들은 러시아가 아닌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함.
  - 울리야노프 국장은 미국의 글로벌 미사일 방어망(MD) 구축 강행, 우주공간 무기 배치 금지 협상 거부, 전(全)지구적 전격 타격 프로그램 추진,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비준 거부 등이 그 같은 부정적 요소들이라고 지적함.
  - 그는 또 “미국이 실전 배치 핵탄두의 수를 3분의 1로 줄이자고 제안한 데는 그들이 이 정도 수준에서도 자국과 동맹국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미국이 핵 군축 전망을 어렵게 하는 행동들을 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핵탄두 추가 감축 조치를 취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일정 상황에서는 핵전력을 증강해야만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함.

## 아. 중·일 관계

- 중국군 간부, “미국 추종만으론 일본 미래 없어”(5/11), 연합뉴스)
  - 중국의 군 간부가 최근 일본 여당 고위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중의 신형 대국관계 속에 미국만 뒤따라가서는 일본에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중국 인민해방군 계열 싱크탱크인 ‘중국국제전략학회’ 소속 군 간부는 지난 5일,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자민당 부총재, 기타가와 가즈오(北側一雄) 공명당 부대표 등 일본 초당파 방중단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미·일은 중국을 위협으로 보고 대응하고 있다”며 “미일동맹을 강화해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중국을 중시하는 새 중일관계를 구축할 것인지”라며 일본이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냄.
  - 그는 또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에 대해 “지금과 같은 태도를 계속 가져가면 미국으로부터도 버림받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에 대해 일본 측 참석자는 “중국 경제가 강해지는 것은 일본에도 좋은 일이지만, 안보 문제는 별개”라며 반론하고,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이뤄지는 중국의 해양진출 가속화가 미일의 경계 강화를 부른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함.
- 中, 일본의 ‘세계정상 히로시마 초청’ 신랄하게 비판(5/13, 연합뉴스)
  - 중국은 일본이 전후 70년을 맞아 각국 지도자들을 상대로 원폭 피해지역인 히로시마(廣島), 나가사키(長崎) 방문을 추진한 것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는데,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회의에) 복잡하고 민감한 요소를 끌어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말함.
  -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미국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NPT 평가회의 첫날 연설에서 각국 지도자가 전후 70년을 맞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방문하자고 제안했고, 이런 내용은 NPT 평가회의 주요 3개 위원회가 정리한 최종 문서의 초안에 포함됐다가 12일(현지시간) 배포된

개정판에서는 빠짐.

- 화 대변인은 또 ‘중국의 반대로 관련 문구가 삭제됐다. 중국 지도자는 히로시마·나가사키 방문을 고려하느냐’는 일본 특파원의 질문에 “저는 응당 당신들 지도자에게 (먼저) ‘언제 중국의 난징(南京)대학살 희생자 추모 기념관을 참관할 것이냐’고 물어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쏘아붙임.
- 中, 日 집단자위권법안 각의결정에 “역사교훈 새겨야”(5/14, 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일본이 각의에서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내용의 11개 안보 법률 제·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역사적 교훈을 깊이 새길 것”을 촉구하며 우려를 표명함.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일본이 역사적 교훈을 깊이 새겨 평화발전의 길을 견지함으로써 아시아의 평화·안정 및 공동의 발전을 진정으로 추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고, “일본이 적극적이고 유익한 일을 더 많이 함으로써 건설적인 역할을 더 발휘해야 한다”고 덧붙임.
  - 화 대변인은 이틀전인 12일에는 같은 이슈에 대해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면서 강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으며, 중국은 일본의 일제 당시 강제노동 장소가 포함된 산업시설의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재 추진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재확인함.
  - 화 대변인은 “해당 산업시설은 중국, 한반도 및 기타 아시아에서 끌려온 노동자들의 강제노동 현장으로 쓰인 곳”이라며 “강제노동은 일본 군국주의가 대외침략 및 식민통치 기간에 저지른 엄중한 죄행”이라고 비판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책임 있는 태도로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함.
- 징용탄광 세계유산등재 中반대에 日정부 “끈기 있게 설명”(5/15, 연합뉴스)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조선인 강제노역 탄광 등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 구상에 중국 정부가 명시적으로 반대한 것에 관해 “외교 경로를 통해 의문점을 끈기 있게 설명하고 싶다”고 밝힘.
  - 교도통신에 따르면 스가 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에 관해 한국과 22일 협의할 예정인 것과는 달리 “중국과는 정부 간 협의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언급함.

- 그는 유네스코의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논란이 된 산업시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도록 권고한 사실을 거론하며 “일본정부로서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싶다”고 강조함.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중국은 일본의 관련 시설에 대한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에 반대한다”고 말하고, 등재 권고를 받은 일부 산업 시설에 관해 “중국, 한반도 및 기타 아시아에서 끌려온 노동자들의 강제노동 현장으로 쓰인 곳”이라며 “강제노동은 일본 군국주의가 대외침략 및 식민통치 기간에 저지른 엄중한 죄행”이라고 지적함.
- 중국-일본, 미 국채 최대 보유국 놓고 앞치락뒤치락(5/16, 연합뉴스)
- 지난 3월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미국 국채 최대 보유국이 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15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가 7개월 만에 373억 달러(40조5천302억원) 늘어 1조2천600억 달러(1천369조원)를 기록했다고 밝혔.
  - 지난 2월 일본은 2008년 8월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제치고 미국 국채 최대 보유국이 됐으나 1개월만인 3월에는 1조2천300억 달러(1천336조원)의 미 국채를 보유하며 다시 중국에 1위 자리를 내줌.
  - 중국의 보유 증가에 힘입어 해외 보유 미 국채는 전월보다 2.1% 증가한 6조1천800억 달러(6천715억원)를 기록했고, 중국 보유 미 국채가 증가한 것과 대비해 중국의 외화보유액은 줄어들어 지난 3월까지 6개월 동안 중국 외환보유고에서 3천억 달러(325조9천800억원)가 빠져나감.
  -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 중 하나로 생각되는 미 국채 수요는 계속 강세일 전망인데, 현재 미국 내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올해 안에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를 인상하면 미 국채 수요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자. 중·러 관계

- ‘열병식 밀월’ 중러, 이번엔 지중해서 합동군사훈련(5/11, 연합뉴스)
  - 최근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행사를 계기로 최고 수준의 ‘밀월 행보’를 선보인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엔 연합군사훈련에 돌입하였는데,

중국군과 러시아군은 지중해에서 처음으로 ‘해상연합-2015(1)’이라는 이름 아래 합동군사훈련에 돌입했다고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이 보도함.

- 21일까지 계속될 이번 연합해상훈련에 양측은 9척의 함정을 투입했는데, 중국군은 북해함대 소속 054A형 미사일 호위함 웨이팡(유<물수변+維>坊)함과 린이(臨沂)함, 종합보급선인 웨이산후(微山湖)함, 함정 이착륙 헬기 2대, 특전부대를 파견했고, 러시아는 흑해함대 소속 순양함 모스크바함을 비롯해 각종 호위함과 상륙함을 투입함.
- 중국 국방부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해상방어, 해상보급, 선박호송, 수송안전 보장 등으로 구성된 이번 연합훈련의 목적은 원거리 항해 안전을 보호하고, 중러 양국의 협력 강화 및 해상안전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 중국 전문가는 이번 훈련은 규모 면에서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지만, 중국해군 사상 가장 먼 거리에서 진행되는 훈련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중국신문망은 “양국은 2003년 이후 쌍방 혹은 다자 훈련을 10여 차례 실시했고 그 중 5번이 해상훈련으로, 이미 양국의 합동훈련은 상시화 단계에 와있다”며 “이번 훈련은 일련의 해상연합훈련의 연장선 위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풀이함.

■ 중국-러시아, 종전 70주년 행사에 ‘품앗이 방문’(5/11, 연합뉴스)

- 중국이 오는 9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 열병식에 러시아군을 초청했다고 중국 국방부가 11일 밝힘.
- 중국은 열병식에 어떤 국가를 초청할지 좀처럼 밝히지 않은 채 2차 대전 당시 함께 싸웠던 서방 연합국 대표를 초청할 수 있다고만 말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이날 로이터통신을 인용해 보도하면서, 신문은 러시아군 초청으로 인해 서방 지도자들이 행사 참석을 더 꺼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봄.
- 중국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중국 중앙군사위 부주석 반장룽(范長龍)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에게 “중국은 베이징 종전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러시아 군 지도자들과 병사들 일행을 따듯이 환영할 것”이라고 밝히고, 시 주석의 러시아 방문과 기념행사 참석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전면적 전략동반자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평가함.
- 텐안먼광장에서 열릴 가능성이 큰 베이징 열병식은 시 국가주석이 지난 2012년

말 중국 공산당 총서기 및 중앙군사위 주석에, 2013년 초 국가주석에 오른 뒤 처음으로 하는 것임.

- 중-러, 미군 치누크 필적 신형 헬기 공동개발(5/12, 연합뉴스)
  - 중국과 러시아가 미군의 CH-47 치누크헬기에 필적하는 신형 헬기 공동연구개발에 합의했으며 연내 최종 연구개발합의안 서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환구시보는 밝힘.
  - 러시아 측은 중국을 중형 헬기의 잠재적 수요처로 보고 있으며 2040년까지 200대 이상의 중형헬기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함.
  - 신문은 이번 중형 헬기 공동연구개발안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지지를 받았다고 밝히고, 또 이 헬기의 최종 성능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탑재물을 최대로 적재하고 이륙할 수 있는 최대이륙중량은 38t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기후와 환경조건에 상관없이 전천후 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함.
  - 이 헬기는 적재중량에서 러시아의 미(Mi)-17을 능가하고 속도나 민첩성, 비용 측면에서 미(Mi)-26을 능가할 것으로 보이며 미군의 CH-47 치누크 수송헬기에 필적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밝힘.
  
- 러시아 국민 77%, “중국이 좋아”...중러밀월 ‘탄탄대로’(5/12, 연합뉴스)
  - 러시아인 10명 중 7~8명은 중국을 우호적인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解放軍報)가 러시아 측 조사결과를 인용해 보도함.
  - 러시아여론기금회가 지난달 말 러시아 전역에서 1천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7%가 ‘중국은 러시아에 우호적인 국가’라고 대답했는데, 이같은 러시아인들의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10년 전과 비교해 30%가량 상승한 것으로 분석됨.
  - 해방군보는 “이 조사결과는 양국 관계가 ‘역사상 가장 좋은 시기’에 왔다는 표현이 과장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주장하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취임 후 11차례 회담을 했고, 양국의 교역액 목표가 올해 1천억 달러로 설정됐다는 점도 거론하며 “중러 양국의 우호관계는 매우 특수하다”고 말함.
  - 특히 서방언론들이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거론하며 현재와

과거의 중러 관계를 대비시키고 있는 데 대해서는 ‘시샘’, ‘도발’이라고 비난하며 “이는 양국관계를 파탄 낸 뒤 각개격파하려는 것으로, 합종연횡과 같은 하찮은 수작에 중국이 걸려들 것으로 보느냐”고 힐난함.

■ 시진핑 주석 유라시아 순방...중러 밀착 ‘일대일로’ 성과(5/12, 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등 유라시아 3개국 방문 일정을 통해 중·러간 관계를 강건히 하고, ‘일대일로’ 구축에서 상당 성과를 올림.
- 시 주석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러시아와의 유례없는 밀월 관계를 재확인하고 정치, 경제, 무역, 외교, 안보 등 분야별 전략적 협력의 수준을 더욱 높여 나아가기로 했는데, 중러간 밀착은 미국이 일본과의 군사적 동맹관계를 격상하며 ‘대중 포위망’을 한층 좁히고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러시아를 제재하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됨.
- 이번 순방에서 시 주석은 중국의 신경제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구축에서 상당한 성과를 올렸는데, 시 주석은 카자흐스탄의 주권 보장을 거듭 천명하며 실크로드 경제지대의 핵심 요충지인 카자흐스탄의 마음을 사는데 공들임.
- 시 주석은 러시아에서도 고속철과 기초시설(인프라) 건설 등 직간접적으로 일대일로와 연관되는 분야의 협력 강화를 이끌어냈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모스크바와 카잔을 잇는 고속철 건설 공동투자에 합의한 것은 일대일로 구상을 위한 정치적 장애물을 없앤 것으로 평가됨. 시 주석의 방문기간 양국은 에너지, 금융 등 각 분야에 걸쳐 총 250억 달러(27조3천억원)에 상당하는 32건의 각종 계약과 협정을 체결함.
- 중국은 벨라루스와의 약 20건의 각종 협력 문서에 서명하며 협력 강화를 다짐했는데, 시 주석은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회담에서 벨라루스가 일대일로 실현을 위해 교통·운송, 인프라·통신의 고리 역할을 맡는다는 데 합의했으며 중국은 벨라루스 측에 10억 달러 수준의 차관을 제공기로 함.
-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는 올해부터 상품·자본·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목표로 한 옛 소련권 경제공동체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을 출범시킨 뒤 단일 경제권 창설을 추진하는 국가들이며, 인민망은 이 같은 점을 근거로 시 주석의



방문이 실크로드 경제지대 추진과 EEU와의 접목을 시도함으로써 일체화된 지역 협력의 성공 모델을 형성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분석함.

- **新밀월' 중국·러시아, 부패척결 등 협력분야 다각화(5/13, 연합뉴스)**
  - 최근 군사협력을 강화하며 '신(新)밀월' 행보를 보이는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8일 (현지시간) 발표한 공동성명에 “중국공산당 중앙 판공청과 중앙기율검사 위원회는 부패 척결을 위해 러시아 대통령실과 협력할 것”이라는 문구를 포함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함.
  - 양국이 반(反)부패 작업에 협력하는 것은 2012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권력을 장악한 이후 처음이며, 양국은 성명을 실행에 옮기려고 부패 사건별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도 반부패 선언을 촉구할 것이라고 신문은 전함.
  - 성명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정치적 합의를 이뤘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중국의 국외 도피범 추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양국은 12일 사상 처음으로 제2차 세계대전 중 중국에서 전사한 구 소련군의 유해를 발굴하는 작업에도 착수했으며, 헤이룽장(黑龍江)성 무링(穆稜)시에서 한 달가량 진행되는 이번 작업에는 중국 고고학자와 대학생 자원 봉사자, 러시아 전문가 17명이 참여할 것임.

## 차. 일·러 관계

- **일본·러시아, 이달 하순 차관급 경제협의 추진(5/11, 연합뉴스)**
  - 일본·러시아 정부가 경제 분야 차관급 협의를 이달 하순 도쿄에서 여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는데, 이 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차관급 협의에 관해 “이달 후반에는 실현하고 싶다. 양쪽이 긍정적이다”라고 말함.
  -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일본 외무성 외정심의관과 리하초프 러시아 경제발전부 제1차관이 회의에 참석해 에너지 분야 협력과 투자 환경 정비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전함.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작년 11월 중국 베이징 회담에서 차관급 협의에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올해 2월

모스크바에서 정치 분야 협의가 열렸고 이제 양국이 경제 분야로 논의를 확대하는 것으로 보임.

- 일본 정부가 러시아와 경제 협의를 추진하는 데는 아베 총리가 다음 달 러시아와 대립 중인 우크라이나 방문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임.

■ 아베 총리, 오바마 대통령에 ‘푸틴 연내 방일 추진하겠다’ 표명(5/16, 연합뉴스)

- 아베 총리는 지난달 28일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담 때 “일본에게는 이웃인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중리 양국이 협력해서 미일 등과 대립하는 자세가 불필요하게 강해지면 동아시아는 불안정하게된다”며 “푸틴과의 대화는 단호히 계속할 것”이라고 말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연내 일본 방문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함.
- 아베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미일 등 주요 7개국(G7)이 우크라이나 문제에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대 러시아 압박을 강조한 오바마 대통령 제언에 대한 반응으로 나왔다고 요미우리는 전함.
- 아베 총리는 푸틴 대통령의 연내 방일 초청 계획과 함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 계획도 오바마 대통령에게 설명하자, 오바마 대통령은 푸틴의 방일 초청 시기에 대해 미일간에 논의하자는 반응을 보였다고 요미우리는 전함. 미국 측에서 푸틴의 방일을 계기로 대러 압박의 공동보조가 흐트러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짐.
- 아베 총리는 러일간 영유권 갈등지역인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반환 협상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 푸틴과의 회담에 적극성을 보여왔는데, 아베 총리는 작년 11월 베이징에서 푸틴 대통령과 만나 ‘2015년 적절한 시기’에 푸틴의 일본 방문을 추진하는데 뜻을 같이 함.

© 국제전략연구실 제공

### Ⅲ. 북한 인권 동향

####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 북한 “미국 북한인권법은 주권 침해, 철폐해야”(5/12, 미국의소리)
  -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 인권이사회가 11일 미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 UPR을 실시했음.
  - 북한의 서세평 제네바대표부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 정부에 북한인권법 철폐를 요구했음.
  - 미국 정부가 북한인권법 등 인권 문제와 관련한 역외적용 법률을 무조건 철폐해야 한다는 것임.
  - 서 대사는 그 같은 법률들은 북한의 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북한 주민들의 권리와 존엄에 대한 모욕적인 침해라고 주장했음.
  - 미국은 북한의 인권 증진을 위해 세계에서 처음으로 지난 2004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음.
  -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탈북자들이 미국에 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법이 제정된 후 지난해까지 미국에 난민으로 입국한 탈북자는 178명에 달함.
  - 또한, 민간 단체와 비영리 단체들이 북한 내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 시장경제 발전을 신장하는 프로그램들을 추진하도록 미 대통령이 재정을 지원하도록 허용하고 있음.
  - 이후 지난 2008년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에 서명했고, 2012년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인권법을 2017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하는 등 그 동안 두 차례 연장됐음.
  - 미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도 북한의 인권 개선을 꾸준히 촉구하고 있음.
  - 한편 북한의 서세평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 정부에 외국 영토에 미군 배치 중단, 중앙정보국 CIA의 고문 문제에 대한 수사와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중 미군의 민간인 살해에 대한 법률적 행정적 조치, 경찰력 남용 중단 조치 등을 촉구했음.
  - 미국 대표단은 이날 회의에서 여러 나라들의 의견과 질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도 북한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음.

- “인기 매대 무려 북한돈 590만원에 거래…장사 활성화”소식통 “시장 인기 매대 사려는 주민 경쟁 치열”(5/12, 데일리NK)
  - 최근 북한 당국이 시장에서의 장사에 대한 통제를 느슨하게 하면서 주민들의 상행위가 활성화 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 매대(좌판)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장사가 잘 되는 상품의 매대를 사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고 소식통이 알려왔음.
  - 북한 양강도 소식통은 “최근 북한 주민들 속에서 매대를 구매하는 일반 주민들이 늘고 있다”면서 “이전 매대에서 장사를 하던 장사꾼들이 돈을 좀 벌게 되면 다른 장사로 옮기는데 이때 보통 매대가 팔리지 않아 걱정이었지만 최근에는 매대를 너도나도 구매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 이어 소식통은 “지금은 매대를 내놓기가 바쁘게 팔려나간다”면서 “위치가 좋은 매대는 사려는 사람이 줄을 서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 매대 값을 비싸게 불러도 빠르게 팔린다”고 덧붙였다.
  - 그러면서 소식통은 “시장 장사를 통제하지 않으니 대부분 주민들이 그나마 안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어 대부분 좋아하고 있다”면서 “시장 매대 장사꾼들은 최근 장사가 잘 돼 돈을 좀 벌고 있고 이들은 장사가 되는 다른 품목 매대를 구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소식통은 “현재 혜산 농민시장에서 공업품 한 개 매대(2.5m정도)는 4500위안(元)정도로 우리 돈(북한돈)으로 약 590만원이나 하는 엄청난 돈임에도 금방 팔려나간다”면서 “하지만 현재 매대가 별로 없어서 매대를 사지 못하는 주민들이 꽤 많다”라고 설명했다.
  - 소식통은 “시장에서 음식이나 쌀 장사꾼 등은 돈을 별로 벌지 못하지만 천이나 가전제품, 잡화 등 공업품 매대 장사꾼들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서 “이렇기 때문에 큰돈을 주고서라도 인기 있는 매대를 구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 소식통에 따르면 시장관리소는 매대장사를 하던 장사꾼이 매대를 팔고 소매 장사를 하게 되는 경우, 매대 매매를 허용하고 있음.
  - 매대 장사를 통해 돈을 모은 장사꾼들이 기존 매대를 다른 장사꾼들에게 비싸게 팔아, 소매업 밀천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임.
  
- 북, 신생아 사망률 동아시아 최고(5/13, 자유아시아방송)
  - 국제 구호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은 북한을 동아시아에서

가장 태어나기 위험한 나라로 지목하면서 어머니로 살기 어려운 나라라고 지적했음.

- 이 같은 내용은 세이브더칠드런이 지난 10일인 ‘어머니의 날’을 맞아 발표한 ‘어머니 보고서’(State of the World’s Mothers)에 소개됐음.
- 북한의 어린이 1천 명 당 27명이 5세 생일을 맞지 못하고 사망함.
- 북한을 제외한 동아시아 지역 국가의 평균인 13명보다 두 배 가량 높음.
- 한국의 5세 미만 사망률은 어린이 1천 명당 4명이며 일본은 3명, 중국도 북한의 절반 수준인 13명에 머물렀음.
- 북한 여성이 평생 동안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사망할 위험성을 산출한 모성사망 위험성(lifetime risk of maternal death)은 630명 당 1명으로 한국의 2천 900명 당 1명과 비교해 4배나 높음.
- 중국의 모성사망위험성은 1천300명 당 1명, 일본은 1만 2천100명 당 1명임.
- 북한은 자료 부족으로 순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출산과 관련한 사망률이 동아시아의 두 배에 이르고 국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연간 620달러로 동아시아 평균인 3천580달러의 5분의 1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음.

- 북한, 선양에 장애인보호연맹 대표부 설치…리분희 초대 대표(5/13,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의 리분희 전 조선장애자체육협회 서기장이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선양대표부 초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대북 소식통은 북한의 조선장애자보호연맹이 국제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3월에 선양대표부를 개설했다며, 리분희 전 서기장이 초대 대표를 맡아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 리 대표는 그동안 조선장애자체육협회 서기장으로서 장애인 체육 분야에 전념했지만 앞으로는 체육 뿐 아니라 예술과 문화 분야의 국제 교류를 확대하는 사업을 총괄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 북한의 조선장애자보호연맹이 해외에 대표부를 개설한 것은 지난 2010년 베이징대표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임.
  - 중국 선양시는 랴오닝 성의 성도이자 중국 동북3성에서 제일 큰 도시로 경제와 문화, 교통, 군사의 중심지임.
  - 소식통에 따르면 베이징대표부는 북한 내 장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외부인들의 방북을 돕는 활동을 주로 해온 반면 신설된 선양대표부는 국제 교류 확대에

초점을 맞출 계획임.

- 이 소식통은 선양대표부가 국제사회와 평양 간 중간역할을 하면서 국제 교류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음.

■ “북, 강제 노동 어린이 마실 물도 인취”(5/15, 자유아시아방송)

- 영국에 기반을 둔 인권단체 ‘유럽북한인권협회’(EAHRNK)는 최근 탈북자 인터뷰를 통해 북한 내 어린이 강제 노역의 실제 사례를 담은 정책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에서는 어린이들이 도로 제설작업 뿐만 아니라 곡식 수확과 생산량 목표 달성을 위해 농장과 공장에 종종 투입되고 있다고 고발했음.
- ‘북한 어린이 강제 노역 방지’라는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유럽북한인권협회’의 제임스 버트 정책 연구원은 홍남 출신 북한 주민은 자신이 어렸을 때 강제로 동원된 곡식 수확 기간에는 마실 물조차 배급되지 않았으며, 이 기간에 영양 실조였던 어린이들이 콜레라에 걸리기도 했다고 증언했다고 말했음.
- 또, 보고서는 여름방학 내내 40일 이상 강제 노역을 하게 되는 어린이들은 주로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 협동 농장에서 일을 하곤 한다면서, 주로 기본적인 숙박과 생쌀 정도가 보상으로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 또 다른 해산 출신의 탈북자는 학교의 교장이 주로 그 지역 농장주와 계약을 맺고 어린이들을 쌀이나 옥수수 수확시기에 농장 등에 동원시키며, 이를 보상으로 음식이나 술을 받았다고 증언했음.
- 북한 정권은 더욱 큰 규모의 어린이 강제 노동을 동원하는 데, 주로 여름에 국가적인 (노동) 동원을 대대적으로 펼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 북, 러에 기념물 건립 기술자 파견 제안(5/15,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경제사절단이 최근 러시아 극동지역 사하공화국(야쿠티야 공화국)을 방문해 건설 분야 협력 확대를 제안했음.
- 15일 사하공화국에 따르면 립청일 나훗카 주재 북한 총영사가 이끄는 북한 경제사절단은 지난 3월28일부터 4월1일까지 나흘 동안 이곳을 찾았음.
- 사하공화국은 시베리아지역에서도 가장 추운 극지대로 다이아몬드 등 광물자원이 풍부하지만 개발은 낙후된 곳으로 알려져 있음.
- 북한이 그 동안 지리적으로 인접해 노동자들을 주로 파견했던 연해주와 하바롭스크 등에서 극지대인 사하공화국으로 파견 지역을 확대할 계획을



내비친 것임.

- 흥미로운 점은 북한이 기술을 갖춘 숙련 노동자와 건설 장비까지 파견해 도로는 물론, 기념물, 빌딩 등을 건립해 주겠다고 제안한 사실임.
- 그러면서 북한의 건설 노동자들이 아프리카와 서남 아시아 지역에서 이미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고 덧붙였음.
- 이제껏 주로 벌목공이나 단순 건설 노무자 위주였던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파견 대상을 숙련 노동자로 대체하려는 시도여서 눈길을 끄.

## 2. 북한 인권

- 인권위, 北 한인 억류 관련 “국제인권규범 따라야”(5/12, 뉴시스)
  - 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북한이 주원문·김국가·최춘길·김정옥씨 등을 억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북한 당국은 국제인권규범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 인권위는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억류된 사람들이 조속히 송환될 수 있도록 유엔 등 국제사회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인권위는 “북한 당국은 주원문 외 3인의 기본적 인권에 대해 북한이 1981년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CCPR)’과 1988년과 1990년 유엔 총회에서 결의한 ‘모든 형태의 구금 또는 수감 중인 모든 사람의 보호에 관한 원칙’,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주원문 외 3인은 자신들이 원하는 외부인과 적절한 방법으로 통신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북한 당국은 지체 없이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 및 가족 등과의 접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그러면서 “현재 주원문 외 3인은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으므로 북한 당국은 이들이 가족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선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억류된 이들의 취약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이들에게 허위진술이나 불리한 증언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음.
  - 끝으로 인권위는 정부를 향해 “주원문 외 3인이 길게는 약 1년 반 동안 가족과도 접촉하지 못한 채 억류돼있는 점을 고려해 이들의 송환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북한 해외 노동자, 심각한 인권 침해 시달려”(5/13, 미국의소리)
  -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가 12일 한국의 대북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와 함께 북한 해외 노동자 현황과 인권 실태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음.
  -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이승주 연구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 정권이 외화벌이를 위해 세계 16개 나라에 5-6만 명의 노동자를 파견했다고 밝혔음.
  - 북한 노동자들은 북한에서 사는 것 보다는 낫다는 생각에 해외로 나가지만,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심각한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말했음.
  - 이 연구원은 특히 북한 노동자들은 사실상 휴일이 주어지지 않는데다 하루 최고 18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지만 임금의 최고 90%를 당국에 빼앗기고 실제로 받는 액수는 10%에 불과하다고 말했음.
  -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사라 맨텔슨 연구원은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이 인신매매에 해당된다고 말했음.
  - 북한 노동자들이 당초 얘기와는 다른 곳에서 일하고 여권을 빼앗기는가 하면 이동의 자유도 없는데다 노동력을 착취 당하는 상황은 인신매매에 해당된다는 것임.
  -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연구소의 로베르타 코헨 연구원은 북한이 인권 침해를 다른 나라에 수출하고 있는 셈이라며, 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음.
  - 코헨 연구원은 북한의 해외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최근 카타르의 건설회사가 북한 노동자를 대량해고한 일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음.
  - 카타르 회사의 이번 조치는 매우 중요하며, 다른 회사들이 유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임.
- 유럽 북 인권 개선 보고서 발표(5/13, 자유아시아방송)
  - 영국에 기반을 둔 인권단체 ‘유럽북한인권협회’(EAHRNK)는 지난 12일 유엔 인권 이사회의 제19차 인권 정례 검토회의 권고안에 기초해 유럽 국가들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 이 보고서는 국제 사회가 이례적으로 북한 인권에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때에 유럽 연합과 유럽 국가들이 북한의 인권 권고안 이행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지를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이어 보고서는 유럽 국가들은 북한 정책 결정자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권의 개선 없이는 지원이나 자금 지원 등을 과감히 철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또 유럽에 주재하는 북한 관료들과의 관계를 적극 활용해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해 압력을 넣어야 하며, 이들이 서방에 제공하는 정보들에 대한 보안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 유럽 국가들이 북한의 인권 개선과 관련해 통일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 또한 유럽 국가들도 북한이 인권 문제에 대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개선을 보이려 할 경우, 외교적인 대안이나 방안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 보고서는 강조했다.
- 이 보고서는 결국 북한 인권을 향한 유럽 국가들의 노력이 결코 간단하지 않음을 강조하면서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표현을 인용해 북한의 인권 상황 변화를 위해서는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박 대통령 “북한, 인권상황 개선 촉구에 적반하장식 반발”(5/14, 미국의소리)

-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이북도민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음.
-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지만 정작 북한 당국은 적반하장 격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개탄했음.
- 또 이산가족의 아픔이 정말 큰데도 북한은 한국 정부의 대화 제의마저 거부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음.
- 박 대통령은 남북한이 분단된 지난 70년 동안 극단적으로 다른 길을 걸어왔고 북한은 한국과는 정반대로 고립과 쇠퇴의 길만을 걸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 또 북한이 최근엔 핵과 경제발전 병행이라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내걸고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크게 위협하고 있으며 며칠 전엔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음.
- 박 대통령은 그렇지만 한국 정부는 북한을 올바른 변화의 길로 이끌기 위해 노력해 왔고 남북한 주민들의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는

데도 힘써 왔다고 말했다.

-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인내심을 갖고 북한이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면서 한반도의 평화통일 시대를 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유엔 안보리, 올해에도 ‘북한 인권’ 다룬다(5/14, 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올해에도 북한의 인권 개선을 압박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오준 주유엔 대사는 13일 유엔대표부에서 뉴욕특파원과 간담회를 하고 올해에도 북한의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밝혔다.
- 유엔은 작년에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부치는 내용의 결의안을 총회에서 채택했으며, 안보리에서도 정식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음.
- 오 대사는 “올해에도 총회가 3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전망했음.
- 작년과 비교해 결의안의 강도가 강해질지 등은 아직 단정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 안보리도 북한 인권을 논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식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음.
- 오 대사는 “안보리에서도 모멘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안보리에서 회의를 한 번 더 할지, 비공식 협의방식으로 할지 등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음.
- 우리나라는 안보리 개혁 방향과 관련해서는 상임이사국 신설보다는 ‘장기·연임 가능 이사국 신설’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오 대사는 설명했다.
- 2년 단임인 비상임이사국보다 더 오래 이사국으로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이사국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임.

■ “유엔회원국 대북제재 보고 미흡”(5/14, 자유아시아방송)

- 유엔이 채택한 대북제재 1718호, 1874호, 2094호의 이행과 관련한 보고서 제출 의무를 과반수 이상의 유엔 회원국이 지키지 않고 있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재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미국 회계감사원(GAO: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이 밝혔음.

- 회계감사원의 토마스 멜리토(Thomas Melito) 국장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불법무기거래 등을 막기 위한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 관련 조사 결과가 같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 유엔 회원국들이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1718위원회’ 즉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단(Panel of Experts)에 대북제재 세 개에 대한 각각의 이행 계획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데, 이 중 하나라도 빠트린 나라가 전체 회원국의 80퍼센트에 이른다는 지적임.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이 첫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2006년 이후 핵 실험 등을 이유로 대북결의와 대북제재를 채택했고, 193개 유엔 회원국들은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자국의 구체적 조치 등을 담은 이행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회계감사원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 중 대북제재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158개 국가 중 94개국은 유엔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한 보고서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음.
  - 회계감사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북제재 관련 보고서(North Korea Sanctions)를 발표했는데,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이달까지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에 관해 조사한 보고서임.
  - 회계감사원은 미국 정부가 행정명령 13687호에 따라 북한 관리 10명과 단체 3곳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독자적인 대북 제재의 유연성을 높였지만, 유엔 회원국들의 보고 의무 이행 소홀로 유엔의 대북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 따라서 미국 국무장관은 유엔 회원국이 대북제재 이행 보고서를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협력해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권고했음.
- 정부, DMZ 도보통과 허용…“관문점은 부적절”(5/15, 프레시안)
    - 정부가 비무장지대(DMZ) 도보 횡단을 추진하고 있는 세계 여성평화운동단체 ‘위민 크로스 디엠지’(Women Cross DMZ)의 입국을 승인했음.
    - 하지만 입국 경로와 관련, 해당 단체에 관문점이 아닌 경의선 육로를 이용할 것을 주문했음.
    - 통일부는 15일 “정부는 위민크로스 DMZ 참가자의 DMZ 통과를 허용한다는 입장”이라며 “입국 경로는 유엔군사령부(UNC)와 협의를 거쳐 검역 등 남북

- 간 출입 등에 필요한 절차 및 과거 전례를 고려하여 경의선 도로를 이용할 것을 단체 측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그러나 정부는 행사 참가자들의 입국 경로로 판문점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임.
  - 판문점이 남북한 출입의 정상적인 경로가 아니라는 설명인데, 실제 남북 간 공식 통행 경로로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출입사무소가 있음.
  - 행사 참가자들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번 행사를 기획했음을 고려했을 때 판문점을 통과한다는 것 자체가 남북관계에 미칠 파급 효과가 적지 않기 때문에,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 및 행사에 속도조절을 하려는 정부 입장에서는 판문점 통과를 쉽게 허용하기 어렵다는 것임.
  - 여기에 이들의 행사 자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반영된 것으로 보임.
  -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워싱턴포스트> 기고를 통해 이번 행사가 북한 정권의 정당성을 옹호할 수 있다면서 “여성 운동가들은 반인도 범죄의 피해자인 북한 여성들을 먼저 대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 국내 일부 민간단체에서도 북한 인권부터 신경써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들의 DMZ 통과를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3. 탈북자

- 탈북자 장진성, 네덜란드 명문대서 북한학 강의(5/16, 미국의소리)
  - 북한의 대남공작기구인 통일전선부 출신 탈북자인 장진성 씨가 네덜란드의 명문 레이덴대학에서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북한학을 강의하고 있음.
  - 장 씨는 시인으로, 한국의 북한전문 인터넷 매체인 ‘뉴포커스’의 대표를 맡고 있음.
  - 장 대표는 지난 3월12일 북한 노동당의 조직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첫 강의를 시작했음.
  - 강의는 이어 김 씨 3대세습 권력구조와 북한의 감시체제인 인민반, 북한의 선전선동 체제, 노동당과 군의 관계 등을 주제로 지금까지 다섯 차례 계속됐음.
  - ‘북한인이 하는 북한학’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장 대표의 강의는 오는 9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학교 측은 장 대표의 모든 강의를 인터넷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에 게재하고 있음.



- 탈북자가 해외 대학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특강을 한 적은 많지만, 정규 강의를 맡은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임.
- 앞서 한국에서 ‘탈북자 출신 1호 박사’로 알려진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이 1999년에 미국 컬럼비아대학에서 초빙교수를 지냈고, 평양사범대학 교수 출신의 탈북자인 김현식 교수가 2003년에 미국 예일대학에서 초빙교수를 지냈음.
- 레이덴대학은 올해 초 장 대표를 초빙교수로 임명하면서 그가 북한 정권의 내부체제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음.
- 이 대학의 램코 브리커 한국학 교수는 첫 강의시간에 학생들에게 장 대표의 강의를 북한을 속속들이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음.

#### 4. 이산가족

- 고령이산가족들, 광복절 성묘 방북 추진(5/13, 뉴시스)
  - 80세 이상 고령 이산가족들이 오는 광복절 북한을 방문, 성묘를 하는 방안이 추진됨.
  -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는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8월 15일 제70회 광복절을 전후해 우선 비무장지대에서 가장 가까운 북한 지역인 개성지역 출신 80세 이상의 이산가족들 가운데 희망하는 분들로 성묘 방문단을 조직하겠다”고 밝혔음.
  - 이어 “관문점을 경유해 북한 땅의 고향을 찾아가 3박4일의 일정을 갖고 선조들의 묘소를 참배하고 가능한 한도 안에서 가족과 친척을 만나고 돌아오는 계획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음.
  - 위원회는 “이번에 추진하는 첫 번째 고령 이산가족 성묘 방문단 방북의 경우는 시범적인 성격을 고려해 50명의 이산가족과 30명의 수행인원, 그리고 20명의 보도진으로 구성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 이어 “우리는 관계 법령에 입각해 정부의 관계 당국과 필요한 협의를 하고 협조를 구하려고 하지만 정부 당국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앞으로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는 시점에 독자적으로 관문점을 경유해 북한 방문 길에 나서도록

할 것”이라고 방침을 밝혔음.

- 위원회는 “인권이사회 및 인권고등판무관실과 난민고등판무관실 및 북한인권 상황 담당 특별보고관실 등 유엔의 인권기구, 그리고 유명 인권단체 대표들의 방북 동행을 초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또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는 이 같은 8월의 1차 시범 방북에 이어 9월에는 함흥과 그 인근지역, 그리고 10월에는 평양과 그 인근지역을 각기 고향으로 하는 80세 이상 고령 이산가족들이 같은 규모의 성묘 방문단을 조직해 역시 시범적인 방북을 시행하도록 하려고 한다”고 계획을 소개했음.
- 위원회는 성묘 방문단의 방북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북측에 사전 통보하겠다고 밝혔음.
- 위원회는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는 앞으로 범국민적인 80세 이상 고령 이산가족 성묘 방문단 방북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출범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동복(李東馥) 상임고문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을 발족시켜서 필요한 실무적 사항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이산상봉실적 초라…현 추세로 520년 걸려”(5/13, 뉴시스)

-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실적이 부진해 대부분의 이산가족이 생전에 상봉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음.
-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는 13일 보도자료에서 “그동안 대한민국에서는 도합 12만9668명의 이산가족들이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해 이뤄지는 상봉 참가를 신청했지만 그동안 이뤄진 19차례의 상봉으로 대면 상봉의 수혜자가 될 수 있었던 신청자는 모두 1956명에 불과하다”며 “그리고 이에 더해 7차례의 화상 상봉의 수혜자는 279명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 위원회에 따르면 상봉 신청자 가운데 대면상봉 성공률은 1.5%이며 화상 상봉을 합해도 성공률은 1.7%임.
- 대면 상봉의 경우 연평균 148.6명의 상봉이 이뤄졌음.
- 상봉을 신청한 12만9668명의 48%에 해당하는 6만2028명이 고령으로 이미 사망했음.
- 2월 말 기준으로 생존해 있는 신청자는 전체의 52%인 6만7640명임.
- 생존해 있는 상봉 신청자들도 대부분 고령자로, 이들의 연령별 구성비를 보면 90세 이상이 12.4%인 8363명, 80세 이상 89세 미만이 42.5%인 2만8784명,

- 70세 이상 79세 미만인 27.1%인 1만8309명, 60세 이상 69세 미만인 10.2%인 6890명, 59세 미만인 7.8%인 5294명으로 나타났다.
- 상봉 신청자의 연평균 사망은 4135명으로 이 같은 추이를 감안하면 생존해 있는 신청자 6만7640명은 앞으로 16년 뒤인 2031년 이후에는 한 사람도 생존하지 못하게 됨.
  - 이산가족 상봉이 지금까지의 평균 빈도와 규모로 이뤄질 경우 지금 생존해 있는 신청자가 전원 대면 상봉의 수혜자가 되려면 520년, 화상 상봉까지 포함하더라도 455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임.

## 5. 납북자

- 특이사항 없음.

## 6. 국군포로

- 특이사항 없음.

## 7. 대북지원

- 미 NGO, 결핵 간염 치료차 방북(5/12, 자유아시아방송)
  -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다음 주부터 약 한 달 동안 북한에서 의료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최근 후원자들에 보낸 소식지를 통해 밝혔다.
  - 이 단체인 하이디 리튼 상임이사는 후원자들에게 방북 계획을 소개하며 세 가지 의료 지원 사업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3주 이상 북한에 머무르는 장기 체류 계획으로, 국립결핵표준연구소의 훈련 진행과 점검, 결핵 진료소에 보낸 수송 물자의 도착 확인, 그리고 의료계

종사자의 건강 검진 등 세 가지 핵심 활동을 설명했다.

- 특히 조선의 그리스도인들 벗들의 지원을 받는 간염치료 시설의 의료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사상 처음으로 B형 간염에 걸렸는지를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 지난 2월 말에 창고형 보관함인 컨테이너에 급수에 필요한 물자, 의학 도서관에 필요한 비품, 작물 씨앗, 비타민, 기본 진료 도구를 대형 선박으로 보냈으며 5월 중으로도 식량, 의약품, 세면 도구 등을 컨테이너 최소 4개에 신고 북한으로 보낼 계획임.
  - 북한에 의료지원을 주로 해 온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2010년부터 식수 위생 사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음.
  - 이 단체의 지원을 받는 북한 의료기관들이 환자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하지 못해서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고 식수 위생 사업을 시작했음.
  - 이 단체의 테리 스미스 지원국장은 한 해 평균 2곳에서 3곳의 의료 기관을 지원했다고 말했음.
  - 물을 퍼올리는 물자와 함께 보낼 영양 식품은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이 지원하는 보건시설에 입원 중이거나 통원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전달된다고 스미스 국장은 덧붙였다.
- 호주, WFP 대북 영양 지원 사업에 230만 달러 기부(5/12, 자유아시아방송)
- 세계식량계획은 13일 웹사이트에 공개한 ‘2015년 국제사회 대북 지원 현황 자료’에서 호주 정부가 230만 달러(\$2,297,090)를 제공했다고 밝혔음.
  - 호주 외교통상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대변인실은 세계식량계획을 통한 지원금이 식량 부족을 겪는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등 북한 취약계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음.
  - 호주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응해 지난 2002년부터 직접적인 대북 지원을 중단하고 세계식량계획 등 다자기구를 통한 인도주의 지원만을 유지하고 있음.
  - 호주 외교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2002년부터 북한에 매년 평균 4백만 달러 상당의 인도주의 지원을 해오고 있다고 밝혔음.
  - 세계식량계획은 호주 등 각국 정부의 지원금으로 북한 현지 영양과자공장과 혼합가공식품공장에서 영양강화식품을 제조해 취약계층에 지원하고 있음.

- 하지만 세계식량계획의 실케 버 대변인은 최근 자금 부족으로 북한 내 영양과자공장 7곳 가운데 5곳이 여전히 가동중단 상태라고 말했다.
  - 세계식량계획은 최근 유엔이 발표한 ‘대북 인도주의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에서 2012년 기준으로 2세 미만 북한 영유아의 85%와 산모의 절반 가량이 최소한의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 또 지난해 7월 북한 내 133 가구에 대한 방문조사 결과 조사 대상의 81%가 조사 전 1주일 동안 질과 양 면에서 적절한 식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특히 콩 생산 감소 등으로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 세계식량계획은 북한 주민의 영양 개선을 위해 올해 양강도와 함경남북도 등 9개 도 87개 군의 취약계층 180만 명에게 식량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를 위해 다음 달 말까지 미화 1억3천750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5월 12일 현재 모금액은 목표액의 54.7%인 7천 530만 달러에 불과하다고 세계식량계획은 밝혔다.
- 스웨덴, 북 아동지원에 64만달러 기부(5/15, 자유아시아방송)
- 북유럽 국가인 스웨덴이 북한 어린이와 여성들을 돕기 위해 550만 크로네, 미화 약 64만 달러를 북한에서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는 유엔 기구에 기부했음.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이 지난주 추가한 국제지원금 자료를 보면, 스웨덴 정부는 유엔아동기금에 지난달 17일 미화 63만 8천 달러를 지원했음.
  - 지난 3월에도 미화 약 61만 3천 달러를 프랑스의 국제구호단체인 프리미어 위장스에 기부해 이 단체가 북한에서 진행 중인 식수개선과 주민들의 영양지원 사업을 도왔음.
  - 스웨덴 정부는 유엔아동기금에 약 64만 달러와 프랑스 구호단체에 61만 달러 등 올해 들어 총 125만 달러를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위해 기부했음.
  - 유니세프는 북한의 5살 미만 어린이의 설사병과 중증 폐렴을 치료하고, 임산부를 포함한 15살에서 40살 사이의 여성에게 미량 영양소를 공급하며, 신생아와 임산부들에게 백신을 주사하는 등 어린이와 여성을 위한 영양과 의료 지원을 진행 중임.
  - 프랑스의 민간구호단체인 프리미어 위장스에 지원한 자금은 황해남도에 있는 의료시설 개선에 사용될 것으로 전해졌음.

## 8. 북한동향

- 韓美 ‘북한인권토론회(4.30, 뉴욕)’ 등 행사 및 외교부의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6월중 서울 개소 계획을 비난하며 “괴뢰당국이 인권모략으로 우리(北) 체제를 헐뜯으면서 우리와 대화를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속 강조(5.10,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특등인권범죄 자들의 해괴한 광대놀음)
- 美 볼티모어市 흑인폭동(흑인청년 경찰 구금 중 사망)을 거론하며 ‘미국이야말로 인권유린의 왕초, 인권불모지’라며 ‘인권유린의 왕초가 세계무대에서 인권재판관으로 자처하는 것은 위선의 극치’라고 비난(5.12, 중앙통신·노동신문/깡패들이 살판 치는 인간생지옥)
- 외교부의 유엔 ‘북인권사무소’ 6월중 서울 개설 추진에 대해 ‘反北 인권모략 소동에 광분하는 자들은 그가 괴뢰패당이든 누구든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고 위협(5.13, 민주조선)
- 北 보건대표단(단장: 강하국 보건상), 5월 14일 ‘세계보건기구(WHO)총회’ 제68차 회의(스위스 제네바)를 참가하기 위해 평양 출발(5.14, 중앙통신·중앙방송)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